

KDI 북한경제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2011. 3



KDI

KDI 북한경제리뷰 편집진

총	괄	고일동(선임연구위원)
편	집	이 석(연구위원)
진		김상기(전문위원)
		이재호(전문위원)
편	집	김상훈(전문연구원)
간		김은영(전문연구원)
사		이원경(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는 북한경제의 실태 및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정리하여 정책당국자, 학계 및 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월별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958-4354 팩스번호 | 958-4090

※본 자료는 KDI 홈페이지(<http://www.kdi.re.kr>)로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차

2011. 3월호

동향과 분석

- » 두만강지역개발과 연변지역의 입지 및 협력방안(이종림) 3
- » 한국기업의 요녕성 진출 현황과 활성화 방안(우영자) 31

경제자료

- » 최근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43

부문별 주요기사 (3.1~3.29)

- 대내경제 61
- 농업 및 식량 65
- 대외경제 68
- 남북경협 72

동향과 분석

- » 두만강지역개발과 연변지역의 입지 및 협력방안(이종림) 3
- » 한국기업의 요녕성 진출 현황과 활성화 방안(우영자) 31

두만강지역개발과 연변지역의 입지 및 협력방안

이종림(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lzhl@ybu.edu.cn

I. 서론

1991년 UNDP가 국제사회에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선포한 이래, 두만강지역 주변국들의 공동노력을 통해 두만강지역 다국적개발은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측은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철도, 도로, 항공, 세관, 항만 등 인프라시설 개선에 대한 자금 투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비교적 큰 개선을 이룩하였으며, 더불어 외자도입, 산업구조조정 등 지역성장의 요소들에서 비교적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국제정세, 이 지역 주변국들의 경제발전수준 및 사회체제 차이 등의 요인으로 인해 두만강지역개발은 여전히 당초 UNDP가 제출한 개발계획 기대에 못 미친 개발 초급단계에 처해 있다.

최근 중국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남해안의 북부만 지역을 에너지 산업단지로 개발할 것과 요녕성의 연해경제벨트개발을 국가차원의 개발계획으로 비준하였다. 이와 동시에 「장길도를 개발개방 선도구로 하는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개발계획 요강」을 비준함으로써 두만강지역개발을 국가차원의 개발계획으로 승격시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므로 두만강지역개발은 또 다시 새로운 라운드의 막을 펼치게 되었다.

본고는 과거 18년간의 두만강지역국제협력개발에서 거둔 성과 및 존재하는 문제점과 그 요인을 살펴보면서 경험적으로 새로운 라운드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두만강지역개발의 필요성

현 시대 세계경제발전에서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글로벌화와 지역경제의 공동체화로서 후자는 전자의 필수적인 단계이며 또한 반드시 거쳐야하는 단계이다. 동북아시아는 세계경제발전에서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 대국들이 집중해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무역질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은 강한 경제보완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정학적, 문화적인 인연으로 지역내 경제교류는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에는 그 어떤 경제협력제도도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만강지역은 지정학적 우월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동북아시아경제협력의 무대로 90년대 초부터 추진되었던 것이다. 두만강지역은 중국, 북한, 러시아 3개국의 접경지역으로서 한국과 일본, 몽골을 인접하고 있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보완성을 발휘시키는 중요한 요충지로 인정받고 거대한 개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륙교의 시발점으로서 중요한 물류통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두만강지역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 1991년에 UNDP는 두만강지역다국적개발 프로젝트를 선포하였으며 1995년 12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 등 3개국은 「두만강지역 경제개발 협조위원회를 설립할 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중국, 북한, 러시아, 한국, 몽골 등 5개국은 「두만강경제개발구와 동북아시아 협력위원회를 설립할 데 관한 협정」과 「두만강경제개발구와 동북아시아 환경준칙의 양해 비망록」을 체결하였다. 이는 두만강지역개발이 학술적인 연구 및 국제사회의 여론추진 단계에서 다국적 공동개발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005년9월초, 중국 창춘(長春)시에서 개최된 UNDP의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 제8차 정부간 협상회의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 한국, 몽골 등 5개국은 만장일치로 1995년에 체결한 협정안을 10년간 연장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명칭도 ‘두만강지역개발(TRDP)’에서 ‘대두만강지역개발(GIT)’로 변경시켰다. 더불어 협력개발지역 범위를 중국의 동북3성과 내몽골, 북한의 라선경제무역구, 몽골의 동부지역, 한국의 동해안지역 및 러시아 원동의 일부지역으로 확대하였다.

두만강지역개발은 바로 자체의 거대한 개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난 18년간 개발을 통해 비록 기대하는 성과를 취득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주변국들의 인정을 받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두만강지역개발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지정학적 관계로 인해 하부지역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두만강지역은 이미 하부지역 경제협력구를 형성하였다. 하부지역경제협력은 지리적으로 인접 혹은 가까운 국가와 지역이 자원의 상호보완,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이룩하는 특수한 형태의 경제협력 형식이다. 하부지역 경제협력은 지정학적 정치와 지정학적 경제의 공동역할 결과이며 세계경제 공동체화와 지역경제 집단화 발전과정에서 지역에 발생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세계적으로 하부지역 경제협력의 역사를 살펴보면,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두개 국가 혹은 두개 이상의 인접한 국가들은 다만 국가간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다면 경제이익의 추동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하부지역 경제협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전형적의 예는 바로 유럽공동체와 북미경제무역구이다. 동북아지역에서는 중국, 북한, 러시아, 몽골이 서로 인접해 있으며 한국은 북한과 인접하고 일본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관계는 두만강지역 주변국들 하부지역 경제협력의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내 무역과 투자 등 영역에서의 하부지역 경제협력을 추진하게 하였다. 그러나 두만강지역개발은 아직도 여전히 하부지역 경제협력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만강지역은 북한의 라진항, 청진항과 러시아의 자르비노항, 포세트항, 블라디보스토크항 등의 항구들을 거점으로 통상구와 운수통로를 통해 지역내 중심 도시를 기반으로 무역, 관광, 수출가공 및 산업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중요한 세계 물류중심이란 거대한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둘째, 동북아지역의 빠른 경제발전과 지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의 보완성은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을 위한 두터운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종합국력을 증진시키며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기본국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무역보호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경제공동체화의 물결은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그러므로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대외개방의 확대를 통해 국제경제에 융합되는 동시에 지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국제 경제협력에서 윈윈(win-win)은 제일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만 국제협력은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상호보완성 역시 윈윈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동북아지역은 현저한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보완성은 동북아지역내 국가간 자연조건 차이와 경제발전의 불균등에서 초래된다. 우선, 자연자원의 보완성으로서 러시아 원동지역 및 몽골 그리고 북한에는 풍부한 에너지, 광물, 수력과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다. 중국도 풍부한 농업자원과 광물자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과 일본은 자연자원이 부족하고 에너지와 공업 원자재의 자급률이 아주 낮아 동북아 지역 내에는 거대한 상호보완성이 있다. 다음으로, 노동력 자원의 보완성으로서 러시아 원동지역에는 인구가 희소하여 노무수입이 필요하며, 한국과 일본은 비록 인구밀도가 비교적 높지만 경제발전과 수출의 확대에 비해 노동력 자원은 부족하며, 중국 동북3성과 북한에는 풍부한 노동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노동력수출이 불가피하여 동북아 지역내에는 노동력의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의 보완성으로서 동북아지역 국가간의 생산력 발전수준과 경제력의 발전수준이 비교적 큰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 기술과 시장에서도 큰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호보완성과 거대한 경제이익은 동북아경제협력 특히 두만강지역국제협력개발의 두터운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동북아 지역에는 아직도 그 어떤 경제협력제도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경제공동체화는 지역경제협력을 불가피하게 한다. 두만강지역 개발은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의 유일한 프로젝트로서 성공적인 개발은 동북아 국가간의 지역공동체화를 추진한다. 지금까지 동북아의 하부지역경제협력은 초급단계에 처해 있지만 21세기 세계경제에서 제일 빛을 보이고 있는 동북아가 세계 경제발전의 최대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경제성장이 제일 빠르며 전망이 제일 밝은 경제집단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협력 메커니즘의 형성은 동북아경제협력을 더욱 추진할 것이고 나아가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조직체의 형성에 양호한 기초가 될 것이다. 두만강지역 개발은 바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우선적이고 시범적인 프로젝트로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전략적 직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두만강지역개발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전초지가 되었으며, 두만강지역의 동북아 국가간에 경제상호보완의 교차점으로서 동북아 국가들이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는 실험실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동북아 국가들의 신속한 발전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한편, 두만강지역은 동북아지역의 정치 및 경제 접촉지대로서 현저한 국제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동북아의 국제관계와 경제협력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만강지역국제협력개발은 동북아의 국제관계, 경제협력 및 동북아지역 경제공동체화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두만강지역 주변국들의 경제협력 의지 강화와 지방정부의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두만강지역국제협력개발의 내재적 추진력이 된다.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은 안정된 국제정세에서 국제경제무역협력을 강화 및 확대하여 동북아경제의 번영을 실현할 데에 관해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박절감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현재 각국은 국제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훈춘시를 두만강지역개발의 전초지로서의 연변지역의 경제개발, 북한은 라선시를 자유경제무역구로 선정, 러시아는 원동지역의 자원개발, 한국은 동해안지역개발 시도 등의 형태로 두만강지역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두만강지역개발에서 추진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정부인 것이다. 이로 인해 추진력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지만 각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각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우세를 토대로 두만강지역개발에 주목하면서 지역의 대외투자자와 무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국제화수준을 제고시키며 발달지역과의 격차를 축소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두만강지역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경제협력의 구체화와 인적교류의 빈번화를 추진하였다.

다섯째,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전쟁과 침략이 끊임없었던 동북아지역은 현재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여전히 냉전이 가시지 않고 있어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발사 등의 문제들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복잡한 국제정세를 자아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와 정치의 양자관계에서 경제관계가 정치관계를 결정한다. 국가간의 안정적이고 활성화한 경제관계는 안정적인 정치관계의 바탕이 되며 국가간의 친선적이고 밀접한 경제관계는 양국간 친선적이고 밀접한 정치관계를 야기한다. 동북아국가들이 두만강지역국제협력개발에서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정치적, 군사적 경쟁이 점차 사라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주변국은 장기적인 평화안정의 실현은 필연적이다. 물론 두만강지역개발에서 상호적인 이익추구로 치열한 경쟁과 논쟁은 불가피할 것이지만 이러한 경쟁과 논쟁은 역설적으로 두만강지역경제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을 가속 할 것이다.

Ⅲ. 두만강지역개발의 변천내용

1. 두만강지역개발의 전개과정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는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중국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제일 먼저 제기하였다. 1990년 7월 16~18일, 중국 아세아태평양연구회, 미국 동서방연구센터(EWC)와 UNDP가 공동으로 중국 창춘(長春)에서 ‘동북아지역경제기술발전 국제학술토

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토론회의 주제는 두만강지역개발과 동북아지역경제협력이다. 이어서 1991년 8월 제2차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두 차례의 국제학술토론회에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처음으로 동북아의 특수한 지정학적 우세를 발휘하여 지역 '금3각'의 개발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두만강지역개발의 국제적인 학술연구를 진행할 것도 제의하였다. 이때부터 두만강지역개발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91년 10월 24일, UNDP는 뉴욕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두만강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국제사회에 선포하였으며 두만강지역개발을 동북아 각국 협력의 관건적인 프로젝트로 선정하였다. 같은 해 10월 16~18일, UNDP는 북한 평양에서 개최된 동북아 6개국의 두만강지역개발 협조회의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 한국, 몽골 등 5개국은 두만강지역협력개발의 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공동한 인식을 가졌으며 이를 전제로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의 관리위원회(PMC)를 설립하였다. 1992년 2월, UNDP는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의 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중국, 북한, 한국, 몽골 등 4개 회원국이 참가하였으며 러시아와 일본은 옵션 신분으로 열석하였다. 그후 UNDP는 「두만강경제개발구의 발전전략」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앞으로 20년의 시간을 걸쳐 300억달러의 투자를 이 지역에 유치하여 중국, 북한, 러시아 3개국의 국경지대인 두만강 '3각주'를 '동북아의 홍콩, 로테르담과 싱가포르'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UNDP 국제전문가들이 1994년에 정의를 내린 두만강지역 범위는 약 7만km²로서 중국내 연변조선족자치주 행정구역의 4.27만km², 북한의 두만강을 접근하는 함경북도 1.5만km²,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남의 1만km²를 포함한다.

2009년 3월 24~25일, 몽골 울란바토에서 개최된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 정부간협상회의까지 UNDP의 협조하에 모두 10차 회의가 소집되었다. 그간 두만강지역개발은 아래와 같은 몇 단계를 걸쳤다.

제1단계: 논증단계(1992~1995년)

중국, 북한, 러시아, 한국, 몽골 등 5개 회원국은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의 추진원칙, 추진시스템, 자금조달방안 등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논증하였으며, 1995년 12월, 뉴욕유엔본부에서 개최된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 정부간협상회의에서 「두만강지역개발위원회를 설립할 데 관한 협의서」, 「두만강경제개발구 및 동북아협상위원회를 설정할 데 관한 협의서」 및 「두만강지역경제개발구 및 동북아환경준칙을 설립할 데 관한 양해비망록」 등 두개의 「협의서」와 한개 「비망록」을 체결하였다. 이는 두만강지역국제협력개발이 그 동

안의 구상과 시동, 전문과제의 연구와 논증단계에서 지역협력개발의 실질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제2단계: 구체적인 협력방의 실시단계(1996~2000년)

통신, 도로, 철도, 금융, 무역, 통상구, 변경, 관광 등 영역에서 각각 실무적인 사업회의를 소집하여 여러 가지 협력방안을 협상하였으며 지역내 무역과 투자환경건설을 중장기 목표로 선정하여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종 조사연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협상을 통해 해당협의를 체결하였고 동시에 각국의 제도개선문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1999년 12월, 제2단계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자아 평가한 결과 별로 낙관적이지 않았다. 제기된 두만강지역개발 진척이 느린 주요원인은 참여국의 주관의식이 결핍되었다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의 추진 메커니즘이 취약했다는 데 있다고도 결론지었다.

제3단계: TRDP에서 GTI로의 전환단계(2001~2005년)

2000년 10월에 개최된 두만강지역개발 정부간 협상회의에서 제3단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탐색하였으며 이때부터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는 두만강지역에만 국한되면 각국의 국가차원에서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 수 없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고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 범위를 동북아국간의 협력으로 확대할 데에 관한 문제를 제출하였다. 이렇게 되면,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는 국가차원의 공동프로젝트로서 중시를 받게 되고 각국 중앙정부의 주목과 지지를 유발시켜 국제금융원조와 민간투자 등 적극적인 용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프로젝트의 추진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프로젝트와 재정지속성을 유지하며, 무역과 투자, 교통과 통신, 환경보호, 관광, 에너지 등 5개 영역에 대한 건설을 추진하여 두만강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두개의 목표를 제출하였다.

제4단계: GTI단계(2005년 이후)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가 10년간 추진을 결속 짓는 시기인 2005년 9월초, 장춘에서 개최된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 제8차 정부간 협상회의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 한국, 몽골 5개국은 1995년에 체결한 프로젝트관리위원회를 10년 더 연장할 데에 관해 만장일

치로 동의하였으며, ‘두만강지역개발(TRDP)’ 명칭을 ‘대두만강지역협력(GTI)’으로 변경시켰다. 더불어 두만강지역협력개발의 지역범위를 중국의 동북3성과 내몽골, 북한의 라선경제무역구, 러시아 원동의 부분지역, 한국의 동해안지역, 몽골의 동부지역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5개 성원국이 재정관리 자금을 공동으로 설립, 중국 훈춘과 러시아 하산간의 ‘도로, 항구, 통상구’를 협력개발, 중국 훈춘과 러시아 크라스키노간의 목재가공운수를 시작하는 등 중국정부가 제출한 6개 양자간 협력프로젝트를 심사하여 공동한 의견을 달성함으로써 두만강지역협력개발은 다년간 회의에서의 연구단계에서 실질조작단계로 전환하였다.

2007년 11월 러시아 블라이보스도크에서 개최된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 제9차회의에서는 대두만강지역협력의 핵심영역체제의 설립과 새로운 프로젝트의 선정에 대해 협의를 달성하였다. 이는 대두만강지역협력에 양호한 바탕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하여 에너지이사회, 관광협의회, 기업 컨설턴팅회와 환경보호방안 등의 안을 설정하였으며 교통네트워크의 확대와 환경보호 등 10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정하여 중장기목표로 추진키로 하였다.

표 1 | 대두만강지역개발의 새로운 프로젝트

분야	프로젝트	프로젝트 내용	비용	출자자
교통	동북아페리항로의 기초시설건설	자루비노-속초-니이카다 정기항선의 개통	5만달러	민간투자
	자루비노항의 현대화 건설	자루비노항의 컨테이너 부두건설	8억달러	민간투자
	몽골-중국 철도건설의 가능성 평가	경제적 가능성 조사와 철도 설계	50만달러	민간투자
	훈춘-마린린노간 철도의 재통행	GRRC와 NRC간 협의방안 체결	5만달러	민간투자
	중국-북한국경선의중국경내 도로와 통상구의 이용	국제운수 협의체결을 위한 프로젝트추진 기구의 설정	5만달러	민간투자
에너지	에너지 역량의 구축	-에너지 위원회를 신설 -에너지 교역의 장벽을 사감	25만달러	민간투자
관광	관광산업 역량의 구축	-관광위원회를 설립 -대두만강지역의 관광 가이드를 제작 -백두산의 다기능 관광방안을 설계	20만달러	민간투자

분야	프로젝트	프로젝트 내용	비용	출자자
投資	두만강지역개발의 성원국관원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두만강지역개발의 성원국 가운데서 발전도상국의 관원에게 시장경제를 배울 기회를 제공	20만달러	한국 혹은 대당국가
환경 보호	지역내 국제간 환경보호의 영향 평가 및 환경보호지표의 표준화	-GTR환경보호 영향의 평가 -동북아 환경보호지표의 표준화	30만달러	GEF와 성원국정부
	두만강수자원보호의가능성 평가	두만강환경보호를 위한 다각 협의를 체결	5만달러	Toshiba (일본)

자료 : 한국 기획재정부(2007.11.16).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주로 물류운수통로건설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여년간 추진된 두만강지역개발에서 이 지역 자본도입이 기대의 효과를 보지 못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두만강지역에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부터 형성된 물류운수통로가 잘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물류운수통로건설을 각별히 중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두만강지역개발의 성과

두만강지역개발은 국제정치환경 및 주변국들의 정치, 경제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90년대 초에는 개발의 붐을 크게 일구었다가 90년대 중반이후 저조기에 접어들면서 두만강지역개발은 어렵고 완만한 발전과정을 지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두만강지역개발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두만강지역의 대외개방도가 더 한층 제고 되었다.

중국의 두만강지역개발은 훈춘시를 중심으로 연변지역 전역에서 전개되었다. 1996년부터 두만강지역협력개발이 실시단계에 들어선 후 중국은 ‘개방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로 개방을 추진’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통상구, 출해, 자본도입, 인재양성’ 등을 두만강지역개발의 주요한 목표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여 중국의 두만강지역개발은 실질적인 진전을 거듭하였다. 러시아와 북한과 항구를 공동사용할 데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였고 한국, 일본과 육, 해, 공의 고객, 화물운수항선을 개통할 협의를 체결함으로써 중국은 초보적으로 이 지역에서 ‘항구를 빌어 출해’ 한다는 목표를 실현하였다. 그 밖에 중국 국무원에서 연변조선자치주의 훈춘시를 기타 일부 변경도시와 함께 제

일 처음으로 변경개방도시로 비준한 후 두만강지역의 개방정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1992년 3월에 국가급 중국-러시아변경경제협력구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훈춘시 경제개발구내에 수출가공단지와 변경호시무역구를 설립하였다. 훈춘시 외에 연변지역에는 연길시경제개발구, 돈화시경제개발구, 도문시경제개발구와 안도시장백산관광경제개발구 등 4개의 성급경제개발구가 설립되었으며 이들 경제개발구는 모두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훈춘의 중국-러시아의 공동무역구, 방천정치관광구, 중국-러시아간 변경선에 길림-러시아자연보호구를 설립 등 프로젝트들도 추진 중에 있다.

북한정부는 두만강지역개발에 의외로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면서 장기적인 폐쇄를 타파하고 1992년 12월 두만강지역에 속해 있는 라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구로 선포하였다. 따라서 「자유경제무역구법」, 「외국인투자법」 등 58개 해당 법안을 발표하고 라진-선봉지역에서 대내외로 봉쇄적인 관리를 실시하는 등 특구정책을 펼치면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였다. 그 뒤로 청진, 라진, 선봉 등 항구도 대외로 개방되었다. 그밖에 북한정부는 이 지역의 총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정하였고 출입국, 세수, 토지, 외자도입, 관세 등 분야에서 우혜정책을 부여하였다. 자유경제무역구내의 항구와 관광자원우세를 발휘하여 지역내경제를 신속히 발전시켜 북한경제를 회복을 시도한다는 것이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러시아는 1990년에 ‘대블라디보스도크계획’ 과 ‘빈해변강지역계획’ 을 제정하고 선후로 원동지역의 시베리아, 사하린, 나호드카와 블라디보스도크 등 자유경제무역구를 설립하여 세계에 블라디보스도크, 나호드카, 자루비노와 보세트 항구를 개방하였다. 1995년에는 두만강지역의 러시아경내의 하산을 자유무역구를 선포하고 두만강자유경제구 방안을 제정하였다. 1997년 러시아 빈해변강지역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향해 클라스키노, 보세트, 슬라브양카, 자루비노항 등 지역을 자유경제구로 수정할 것을 신청하였다. 또한 중러 쌍방의 교통운수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중국변경화물운수에 우혜정책을 제정하여 중국변경의 화물이 러시아내의 운수조건에 따라 49년간 원동지역항구를 통해 수송될 것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1997년 12월 11일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 러시아 양국 대표단이 러시아 원동지역항구를 이용하여 중국 화물을 수송할 데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빈해변강지역과 중국 길림성의 교류는 날로 빈번하였는 바 이는 러시아가 두만강지역협력개발의 열정이 점차 높아졌음을 말해 준다.

둘째, 두만강지역의 기초시설건설이 가속화 되었고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

국가급 경제개발구로서 훈춘변경경제개발구의 기초시설건설은 그동안 총 5.6억위안

(인민폐)을 투입하여 130여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이미 초보적으로 생산여건이 구비되었다. 따라서 구역내에는 보세창고, 변경무역시장, 표준화 공장건축물, 오락장소, 학교와 오피스텔 등 생산, 생활서비스 시설들이 설립되었다. 특히 훈춘시에 에너지, 교통, 통신, 인터넷 등 기초시설에 대한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두만강하류지역의 투자환경은 크게 개선되었다. 이와 동시에 연변전역의 기초시설건설도 다그쳐 추진되어 지역내외의 교통망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대내적으로 중국 내륙시장을 잇는 훈춘-도문 구간의 철도는 이미 부설되었고 훈춘-도문 구간의 국가 2급도로는 오래전 부터 개통된 기초에서 내년에는 훈춘-도문 구간의 고속도로가 개통될 것이며, 도문-연길 구간의 고속도로가 2001년에 개통된 뒤 장기간의 건설을 통해 연길-장춘간의 고속도로도 이미 2008년 9월에 개통되어 내년말에 훈춘-장춘 전구간의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될 것으로 전망됨으로서 두만강지역 운수통로의 국내간선은 이미 완성된 상태이다. 한편, 연길시를 중심으로 각 현시를 연결하는 국가1급도로망이 기본적으로 형성된 상태로서 다만 현재 연길과 왕청현을 잇는 고속도로건설이 공사중에 있는데 이 공사가 준공되는 2011년 말이 되면 연변전역의 교통도로망은 비교적 완벽한 여건을 가지게 된다.

연길공항은 연간 120만명의 여객운수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국내 10여개의 항로를 개통하고 있으며 2000년 8월에 연길-서울간의 전세기 직항선이 개통된 이후 현재는 연길-인천간의 정기항선에 개통되어 국제공항으로서 참답게 운영되고 있다.

전기, 석탄 등 에너지기초산업의 건설을 강화하여 석탄생산량은 연간 350~400만톤에 달하며 발전기 총용량은 66만kW이다. 체신통신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실시한 결과 통신시설은 크게 개선되었고 선도적으로 발전됨으로서 전세계의 주요한 국가와 지역과 직통할 수 있다. 연길, 훈춘 등 지역의 도시건설도 큰 성과를 취하여 도시기초시설과 낡은 도시개선도 현저한 성과를 취하였으므로 새로운 변경개방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정부는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늘이면서 철도, 도로, 항만 및 통신시설 등 기초시설건설을 틀어 쥐었다. 따라서 라진, 선봉항의 여건이 개선되었고 라진-원정리 구간의 도로도 아직 비포장도로이지만 크게 보수되었으며 라진에서 두만강리와 우의철교를 경과하여 러시아로 통하는 도로(43km)도 새로 보수되었고 라진에서 중국 훈춘으로 통하는 원정리 통상구도 국가1급 통상구로 비준되었다. 따라서 북한경내 두만강지역에 속해 있는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의 기초시설은 어느 정도의 개선을 가져 왔으며 투자환경도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

러시아정부는 1994년 7월에 중국 훈춘으로 통하는 철도부설을 비준하여 1997년 10월

러시아 마린닌노와 중국 훈춘 구간의 철도가 부설, 연결되었고 또한 블라디보스도크-훈춘 구간의 1급도로가 구축되었다. 러시아는 두만강지역이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유럽대륙을 잇는 시발점으로서 두만강지역개발에 대한 참여가 대블라디보스도크계획의 일부라고 인식하고 미래 두만강지역 항만건설프로젝트에서 러시아의 주요한 항만의 위치를 쟁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러시아로 하여금 두만강지역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게 하였으며 도로 철도, 항만과 통신시설 등 기초시설건설의 진척이 크게 빨라졌다.

셋째, 두만강지역의 과경(跨境)관광¹⁾업이 발전되었다.

두만강지역개발의 국제협력프로젝트로서 또한 유일하게 성공한 프로젝트 케이스로서 두만강지역의 과경관광업이 신속히 발전되었다. 중국, 북한간의 변경관광은 1991년에 시작되었는데, 그해 중국국제여행사 훈춘지사는 훈춘-셋별관광코스를 개척하였다. 그 뒤로 연변지역의 기타 현, 시 여행사는 선후로 평양-금강산 혹은 라진, 선봉관광코스도 개척하였다. 1995년이후 연변관광업은 두만강지역개발의 중요한 기동산업으로 확정되었다. 1999년 훈춘에서 ‘99두만강관광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서 두만강지역의 과경관광업의 발전을 더욱 추진하였다. 현재 중국, 북한간의 과경관광코스가 훈춘-라선 관광코스, 화룡-삼지연-백두산 관광코스, 화룡-삼지연-평양-백두산 관광코스, 용정-청진-칠보산 관광코스 등이 있다. 중국, 러시아간의 관광은 1998년 5월 5일 훈춘-슬라브양카간의 여객버스가 개통되면서 부터 시작되어 쌍방은 첫 관광팀을 교환하였다. 2000년 4월부터 훈춘-블라디보스도크 관광코스, 훈춘-슬라브양카간 관광코스, 훈춘-블라디보스도크-모스크바 관광코스, 훈춘-자루비노 혹은 보세트 관광코스 등의 관광코스가 정식으로 개척되었다. 중국, 한국간의 관광은 양국이 수교되면서 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는데 주로 백두산관광코스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 4월에는 한국 ‘동춘항’이 한국 속초-러시아자루비노-중국훈춘간의 페리를 개통하면서 속초-자루비노-훈춘-백두산의 다국적 관광코스를 개척하였다.

넷째, 동북아지역내에 새로운 두만강지역운수통로가 형성되었다.

두만강운수통로는 80년대말 두만강지역개발연구센터로부터 제기된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대륙을 잇는 동북아지역내의 새로운 운수통로이다. UNDP는 1991년 4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두만강지역교통회의에 UNDP 관원과 국제전문가 및 동북아각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아 두만강지역 철도, 도로, 해상운수, 항공 등 영역에서의 교통망의 계획과 분포문제를 에워싸고 전문토론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각국은 두만강지역물류기초시설

1) 인접국간 이루어지는 관광[편집자 주].

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5년 9월초, UNDP가 북한 라진에서 개최한 두만강지역 육지통상구 및 항만에 관한 회의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의 대표들은 두만강지역 국가간의 화물통과, 변경검사 및 관세부과, 외화관리, 제3국 세관통과 등의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중국 정부는 두만강지역통상구, 도로, 철도 등 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또한 계열적인 건설과 투자계획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훈춘관하통상구와 철도통상구를 국가1급 통상구를 승격시키고 1,027만위안(인민폐)을 투입하여 권하세관을 재건하였다. 현재 권하세관은 8개 출입국 통로, 2개 차량통로를 가지고 있어 연간 60만명의 여객통과와 60만톤의 화물이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훈춘철도세관도 연간 250만톤의 화물과 50만명의 여객이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두만강지역에는 라진, 웅상, 선봉, 포세트, 자루비노 등 규모가 비교적 큰 5개 항구가 있다. 라진항은 7개 부두를 지니고 있고 현재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2호부두는 연간 400만톤의 화물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 선봉항은 석유처리 전용항구로서 연간 2,000만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다. 자루비노항은 4개 부두를 갖고 있는데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12,000만톤이다. 포세트항은 3개 부두를 갖고 있는데 주로 석탄, 목재 등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도로는 두만강지역 물류운수통로의 중요한 기초시설로서 그 동안 크게 개선되었다. 우선 장춘-도문 구간의 고속도로는 완전히 개통되었으며 도문-훈춘 구간의 고속도로도 2011년말에 개통될 것이다. 훈춘에서 라진으로 통하는 중국경내의 훈춘-권하 구간의 국가급 시멘트포장도로는 2000년 12월에 개통되었다. 훈춘-장영자 세관간의 도로도 1995년에 개통되었으며 장영장세관-자루비노항간의 도로도 이미 개통되어 컨테이너운수가 편리한 여건을 갖추었다.

철도는 두만강지역개발이 진행되면서 1996년 6월 훈춘-도문 구간의 65km 철도가 개통되었으면 훈춘-마린니노간의 국제철도도 부설되었다. 현재 도문(혹은 훈춘)-장춘간의 고속철도부설도 계획중으로서 2013년에 개통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요컨대 지난 10여년간의 자금 투입을 통해 두만강지역의 물류기초시설은 아주 큰 개선을 가져왔다. 따라서 두만강지역국제협력개발의 제일 첫 협력 프로젝트로서 연변해운업이 탄생되었다. 두만강지역개발이 실시된 이후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는 장기간 북한과 러시아와 항구를 임대하는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궁극적으로 북한과 러시아 항구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으로 통하는 육해항운루트를 개통하기로 협상을 맺었다. 따라서 연변지

역은 북한의 라진항과 러시아의 자루비노항, 포세트항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으로 통하는 해운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0년 4월에는 한국 ‘동춘항’ 이 운영하는 훈춘-자루비노-속초간의 페리항선도 개통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국제환경의 특수성과 경제기반의 취약성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90년대 중반이후 두만강지역개발은 침체상태에 진입하여 동북아지역의 물류는 기대에 어긋나 두만강지역운수통로의 물류는 점차 위축되었고 따라서 두만강지역운수통로의 기초시설의 개선속도는 점차 둔화되었다.

IV. 두만강지역개발의 문제점과 요인

1. 두만강지역개발의 제약요소

두만강지역개발은 18년간의 추진을 통해 비록 없었던 것으로 부터 일정한 성과를 취득하였으나 동북아지역의 복잡한 국제정치환경 및 두만강지역국제협력개발 참여국간의 비교적 큰 체제차이, 더불어 이 지역의 취약한 경제기반 등의 요소로 인해 UNDP가 당초 제기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철저히 실시하지 못했다. 주로 각국이 접수할 수 있는 국제 법규와 실행이 가능한 두만강지역의 다국적 협력 및 공동개발의 총체적 계획이 결핍, 통상구의 소통 난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였고 지역협력의 투자환경이 아직도 열악하여 민간투자자의 주목을 끌지 못하였고, 공동으로 이익을 윈윈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 형성되지 못하여 협력심이 결핍되는 등의 요소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리하여 두만강지역의 협력은 아직도 초급단계에 처해 있으며 협력은 산만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양자간 협력을 위주로 하고 있다.

두만강지역개발의 제약요소는 아래와 같이 귀납할 수 있다.

첫째, 동북아의 복잡한 국제환경이다.

비록 최근 년간 두만강지역 국가들의 양자간 관계는 현저히 호전되었고 특히 한반도의 정세가 완화되어 가고 있지만 호전과 완화의 뒤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와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90년대 중반이래 북핵문제를 에워싸고 이 지역에서 북미간의 논쟁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6차의 ‘6자회담’ 이 진행되어 많은 진전이 이룩되어 가고 있던 것이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재차 가동

되면서 북한은 '6자회담'에 영원히 불참한다고 선포하면서 '6자회담'이 또다시 중단되었다. 이렇게 90년대 초반에 나타난 북핵문제는 10여년간의 논쟁을 진행해 왔지만 자주 반복을 보이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북핵문제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더불어 동북아지역에는 하나의 모순이 해결되기도 전에 새로운 모순이 또 발생하는 것이 지나온 경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지역의 국제정세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국제정세는 두만강지역으로 하여금 국제협력의 분위기를 형성시키지 못하게 한다.

둘째, 두만강지역개발의 성원국들이 비교적 큰 체제차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윈윈의식이 결핍되었다.

다국적 지역의 공동시장은 세계경제시장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다국적 공동시장 참여국의 경제체제는 반드시 시장경제체제여야 한다. 다국적 지역공동시장의 형성이 초급단계에 처해 있더라도 참여국의 경제체제는 적어도 상품경제체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점차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만강지역의 주변국들의 경제체제는 다양하고 현저한 차이를 갖고 있어 이 지역 다국적 공동시장의 개발에 중요한 저요소의 하나가 되었으며 또한 협력개발의 산만성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북한은 계속 고도의 중앙집권제 계획경제체제를 고집하고 있어 경제개발의 우월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상세한 해당 법규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자본도입과 대외경제협력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국들의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 실시와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는 비록 일찍이 시장경제체제를 실시하였지만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중국과 달리 상층구조로 부터 시작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총체적인 시장경제의식이 미약하여 두만강지역개발에서 소극적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만강지역 주변국들의 사회제도, 의식형태, 경제체제와 기술수준 등 영역에서의 아주 큰 차이로 인해, 특히 두만강지역국제협력개발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 참여국들이 윈윈의식이 결핍되어 주변국들은 모두 중국만이 실리를 얻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협력의 응집력이 약하다.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러시아와 북한은 정치적으로 중국을 질투하면서 그들 각자가 경제협력의 주도력이 되고자 한다. 두만강지역개발의 참여의식 시발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경제협력 가운데서 예기수익배분에 아주 민감하고 모두 두만강지역개발의 중심이 반드시 자기들의 국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보면, 두만강지역국제협력개발은 초급단계에 처해 있으며 협력은 광범성과 긴밀성이 결핍하며 협력형태는 산만성을 나타내고 협력

방식은 일반적으로 양자간 협력을 위주로 하고 있다.

셋째, 하부지역 국제협력개발이 아주 큰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하부지역 국제협력은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 실천 가운데서 태어난 하나의 협력체들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방식이다. 생산요소가 ‘하부지역’의 지정학적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생산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실현하여 협력의 각자에게 공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하부지역 경제협력은 비록 경제공동체화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협력내용, 협력형식과 발전추세는 경제공동체화와는 다른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의 한 경제학자의 정의에 의하면 하부지역 경제협력은 “3개 혹은 3개 이상의 국가를 포함, 치밀하게 정해진 범위, 지리적으로 잇대인 다국적 경제구로서 회원국간의 생산요소 부존의 차이를 이용하여 대외지향형의 무역과 투자를 추진” 하는 협력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부지역 경제협력의 기반은 비교적 낮은 차원에서의 경제보완성이다. 두만강지역은 바로 이러한 하부지역 경제협력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두만강지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하여 비록 생산요소측면에서 일정한 보완성을 구성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부 초급 생산요소의 보완에 집중되고 있다. 하부지역 경제협력에서 협력의 주체는 지방정부로서 두만강지역 각국 지역경제의 상대적 낙후성 또는 참여국 경제의 불균형성으로 인해 각국 정부의 지원은 주로 정책측면에서 부족할 뿐 적은 자금을 투입하면서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하부지역 경제협력은 대부분 각 참여국의 변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군사안보경향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협력프로젝트의 협조측면에서 지방정부 권한의 한계성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특히 주요한 참여국인 북한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도의 중앙집권제를 실시하는 나라로서 지방정부 권한의 한계성을 더욱 뚜렷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두만강지역개발은 한동안 ‘과열개발’이 있던 후 점차 침체에 접어들었던 것이다. 또한 협력 메커니즘측면에서 보면, 하부지역 경제협력에서 각 참여국은 행동의 소프트제한만 강조하고 있지만 강한 규제력을 지닌 조직기구가 설립되지 않아서 기능 일체화를 나타내지만 제도성 일체화는 체현되지 않고 있다. 강력한 조직에 의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참여국의 행동이 비교적 큰 일방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협력의 조달을 어렵게 되어 두만강지역개발의 진척은 아주 큰 영향을 받게 한다. 그것은 일방적인 개발의 어려움이 작고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력의 추진 저애력이 크기 때문이다.

넷째, 두만강지역의 경제기반이 아주 취약하다.

두만강지역의 취약한 경제기반은 기초시설건설에 대한 자체 투자를 어렵게 한다. 우선

북한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요인으로 외국자본이 기초시설영역에서의 투자를 더욱 불가능하게 하여 북한의 기초시설과 투자환경은 악순환을 가지게 한다. 러시아 원동지역은 기존의 투자환경이 낙후한 지역이다. 게다가 러시아 연방정부는 원동지역에 대한 재정원조를 삭감하여 각 지역에서의 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원동지역의 지방재정은 급격히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초시설건설에 대한 투자는 더욱 제한되었다. 게다가 두만강지역개발의 국제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원동지역은 연방정부의 이 지역에 대한 주목을 끌 수 없어서 투자의 매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원동지역의 기초시설과 투자환경은 근본적인 개선을 가질 수 없었다. 중국경내에서는 길림성이 중국의 양식생산기지로서 제조업에서의 기동산업이 많지 않다. 그리하여 길림성의 경제발전수준은 전국 31개 직할시, 성, 자치구 가운데 낙후상태에 처해 있어 지방재정도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두만강지역의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어렵게 하며 두만강지역개발 핵심지역에 처해 있는 연변지역의 경제력은 더욱 미약해서 자체투자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다. 연변지역은 소수민족지역으로서 중국의 서부대개발의 지역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연변지역의 경제개발은 국가의 재정원조와 우혜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부대개발의 재정원조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따라 비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개혁개발초기 국가에서 동부지역의 개발을 위해 직접투자를 진행한 것과는 구분되는 간접적인 지역개발정책이다. 하물면 두만강지역개발의 국제환경이 미숙하고 또한 90년대 중반이후 두만강지역개발이 침체에 진입하는 상태에서 두만강지역개발을 더 한층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의 본격적인 투자는 더욱 불가능했던 것이다. 위에서와 같은 중국의 지역개발정책의 변화는 두만강지역개발에서 지방재정의 투자가 제일 중요한 것이 었다. 그러나 연변지역을 포함한 길림성의 경제발전수준으로 보아서는 자체투자가 아주 어려운 것이다.

V. 뉴 라운드 두만강지역개발의 배경과 내용

1. 뉴 라운드 두만강지역개발의 배경

중국 국무원은 2008년 1월 16일에 「광서북부만경제구발전계획」을 정식으로 비준하였다. 중국정부는 ‘3남(서남, 화남, 중남)’을 광서북부만경제구로 선정하고 동중서를 소통하며 동남아를 상대하여 다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교류의 중개와 협력의 무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개방협력으로 건설을 추진하며 중국-아세안의 개방협력의 물류단지, 무역단지, 가공제조업단지와 정보교류센터로 건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광서북부만경제구는 중국 서부의 유일한 연해지역이다. 광서북부만은 중국-아세안자유무역구, 범북부만경제협력구, 대매콩강하부지역, 중국-베트남의 ‘두개 통로와 한개 경제권’, 범주강(珠江)삼각경제구, 서남6개성(구, 시)협력구 등 여러 지역협력의 교차점으로서 남으로는 북부만을 가지고 있고 북으로는 대서남지역을 등지고 있으며 동으로는 주강삼각주를 연결하여 동남아를 상대하고 서남으로는 베트남과 인접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부만경제구는 중국의 연해와 아세안국가들과 육상으로 교류하는 요충지이며 중국과 아세안의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중요한 교량이고 기지가 되며 입지가 우월하고 전략적 위치가 뚜렷하며 발전잠재력이 거대하다.

전문가들은 광서북부만경제구를 지역경제공동체화를 시작하는 새로운 여정으로 될 것이며 점차 서부대개발전략의 뒷받침이 되고 중국연해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성장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9년 7월 1일, 중국 국무원은 또한 「요녕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을 비준하였다. 요녕연해경제벨트는 대련, 단둥, 금주, 영구, 반금, 호로도 등 연해도시를 포함한다. 이 경제벨트는 중국의 북방연해지역에서 발전기반이 비교적 좋은 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입지우세가 아주 뚜렷하다. 환발해지역의 중요한 위치에 입지하여 중국동북경제구와 경진익(京津翼, 즉 북경, 천진, 하북성)도시권의 결합부분이며 동북아경제권의 관건적인 지역으로서 한국, 북한, 일본을 바다로 사이에 두고 있고 러시아, 몽골과 접근하여 있어 동북지역의 대외개방의 중요한 창구이며 유럽대륙이 태평양으로 통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요녕연해경제벨트의 발전은 국가발전의 전체국면에도 관계되어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중국은 아래와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새로운 경제성장축을 육성시키고 형성하여 북방연해지역의 발전수준을 높일 수 있으므로 중국의 연해경제분포를 더욱 완벽하게 한다. 둘째, 동북지역과 환발해지역의 상호융합을 추진하고 전국연해지역간의 상호발전을 추진하여 공동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한다. 셋째, 요녕성과 동북지역의 총체적 경제실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동북노공업기지의 진흥을 추진하여 전국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양호한 분포를 형성함으로써 국가의 지역발전의 총체적 전략실시에 유리하다. 넷째, 요녕연해경제벨트의 발전은 요녕성, 나아가서는 동북지역 전반의 대외 개방도를 높이고 종합실력과 국제경쟁력이 더 한층 강화되며 동북아 각국과의 경제기술협력이 강화될 것이고 중국, 한국, 일본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심화되며 동북아지역경제공동체화의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여건이 창조될 것이므로 동북아지역경제협력에 유리하다.

요녕연해경제벨트개발은 환발해만에 의거하여 동북지역을 위해 추진하며 동북아를 상대로 동북지역 대외개방의 중요한 무대, 동북아지역의 중요한 국제해운중심, 국제경쟁력을 지닌 항구와 인접한 산업벨트, 생태환경이 우아하고 생활거주환경이 편안한 지역으로 건설하여 중국연해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축을 개발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동남아경제권을 상대하는 북부만경제구의 개발과 환발해경제권을 상대하는 요녕연해경제벨트의 개발은 중국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이라는 의미에서 동북아경제권을 상대하는 두만강지역개발이 국가차원의 지역개발의 프로젝트로 승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더불어 러시아는 원동지역에 230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하여 원동지역을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외 지역개발의 환경이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2008년 6월 중국 국무원발전개혁위원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에 위탁하여 「중국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을 편차하게 하였으며 2009년 8월 30일 국무원은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개발계획 요강-장길도를 개발개방 선도구로」(아래에서 「계획요강」으로 간칭)를 비준하였다. 이 「계획요강」의 비준은 이후 「광서북부만경제개발구발전계획」 발표와 함께 또 하나의 국가주체기능지역계획에 편입된 지역개발계획으로서 두만강지역개발의 새로운 라운드의 막을 열게 되는 것이며 또 다시 국내외로 부터 새롭게 주목을 받을 것이다.

2. 새로운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의 특징

지난세기 90년대 초와 비교하면 현재 추진하는 두만강지역개발은 주변 환경이 더욱 우수하고 추동력이 더욱 충족하다. 18년전 UNDP의 주도하에 추진되었던 두만강지역국제

협력프로젝트는 다년간의 침체를 걸쳐 현단계에 와서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상태에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새로운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²⁾

우선, 중국이 선진적으로 발전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국가이익을 체현하는 특징, 즉, 중국이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의거하지도 않으며 기회를 앞서 점령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마땅한 역할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중국 국무원에서 최근에 비준한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개발계획 요강-장길도를 개발개방 선도구로」에서 ‘장길도를 개발개방 선도구로’ 하는 부제는 바로 두만강지역에서 중국이 먼저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길도 개발개방전략의 내재적 의의는 두만강지역협력으로서 두만강지역 총체적 개발에서의 ‘선수’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역사 판형산(范恒山) 사장은 “두만강국제지역협력의 추진은 우리나라 대외개방의 중요한 전략이다. 장길도개발개방의 추진은 협력영역과 공간의 더한층 확대에 유리하며 두만강국제지역협력을 더 깊이 발전시키는데 유리하며 우리나라 총체적 대외개방의 구조를 더욱 개선시킨다”고 하였다.³⁾

둘째, 기초시설건설의 확대 및 분포의 합리화 특징, 즉, 국제물류통로건설을 돌출히 하여 항구, 철도, 고속도로, 통상구건설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항구는 북한과 러시아의 항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동해연해안간의 항선과 중국동남연해 지역간의 육해항선을 개척하다는 것이다. 철도는 도문-장춘 구간의 고속철도를 부설하고 북한과 러시아철도를 연결하며 도문-훈춘-장영자 구간의 철도를 철저히 개선하는 것이다. 도로는 훈춘-장춘간의 고속도로를 개통함과 동시에 요녕, 흑룡강성의 변경통상 구도시를 통하는 동북동부변경고속도로 건설하며 북한의 라진항과 청진항, 러시아의 자루비로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통하는 고속도로의 건설이다. 통상구는 두만강변에 설치된 중국, 북한간의 통상구인 권하세관, 도문세관, 회령세관, 중리 변경세관인 장영자세관 개선과 훈춘철도세관의 확대건설, 도문철도세관의 신축, 개산툰철도세관, 남평철세관, 춘화분수령세관 등 통상구의 통로와 검역빌딩, 해당시설 및 이들 통상구로 통하는 도로의 건설이다.

셋째, 산업발전계획측면에서 산업유치와 분포의 합리화 특징, 즉, 산업을 대형화, 규모화, 고수준, 생태화 방향으로 육성시키고 국내외의 두개 시장, 두개 자원을 충분히 이

2) 郭文君, 『圖門江地域合作開發中延邊經濟發展戰略研究』, 延邊大學博士學位論文, 2009.

3) 石明山, “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打造東北新增長極”, 『科學時報』, 2009.9.21.

용하여 두만강지역의 석유산업, 금속광산물 및 야금산업, 자동차 및 장비제조업, 하이테크 산업, 식품산업, 임산산업, 의약산업과 건축원자재산업 등 입지우위와 자원우위를 같은 주도산업 및 연관 산업기지를 건설하여 산업구조 고급화를 실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넷째, 장길도 개발개방 선도구의 경제변영으로 주변국가와의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을 유도한다는 특징, 즉, 훈춘시와 북한의 라선지역, 러시아의 하산지역간의 전면적인 양자간 협력으로 다자간 협력을 이끌어 점차적으로 동북아의 특색을 지닌 두만강다국적 자유무역구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비즈니스투자, 금융, 제품질량의 검사 및 검역, 관광, 노동력, 과학기술, 문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국제정보교류서비스센터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두만강지역협력개발의 목적은 경제변영을 추진하고 역으로 지역협력과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두가지 자원, 두개 시장'에 입각하여 협력을 기반으로 윈윈 목표를 달성하며 협력프로젝트건설을 다그쳐 경쟁력이 있는 개방산업체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양자간 협력은 주로 러시아와 에너지 비축과 개발기지를 건설하고자 대형국제화에너지비축과 생산기지의 건설 및 임산제품생산기지를 건설할 때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다자간 경제협력은 북한, 러시아와 협력하여 철강생산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한편, 무역, 관광, 식품생산 등 영역에서도 다자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은 주변국가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북한의 두만강지역협력개발, 러시아 원동지역의 발전계획 및 한국 동해연해안지역개발, 일본, 몽골 등 주변국가의 발전계획과 상호추진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각국의 경제사회발전 전에 적극적인 추진역할을 할 수 있다. 그중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이 제일 클 것이다. 북한은 라선경제개발구의 대외통로와 풍부한 자원우세를 이용하여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건설을 추진하고 식량문제, 기초시설후진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두만강지역의 지정학적 입지우세를 발휘하여 동북아지역협력에서 교량역할과 중개역할을 할 수 있다. 러시아에게는 원동지역발전계획의 실시와 상호추진역할하게 됨으로 중국과 러시아 원동지역간에 자원보완, 교통시설 상호이용 등의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한국에게는 최근 동해연해지역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동해경제권 형성에 좋은 외부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3. 「계획요강」의 내용

「계획요강」의 발표는 뉴라운드 두만강지역개발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

내지 국내업체에서도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계획요강」에서 ‘장길도 개발개방 선도구’의 건설은 훈춘을 창구로, 연길-용정-도문을 전초지로, 장춘-길림을 엔진으로, 동북지역을 뒷받침으로 하는 총체적 분포를 형성하여 동북지역 개방의 새로운 관문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길림성에서 한국과 일본자본의 흡입력을 강화시키고 연해지역과 내륙지역간의 양호한 역동관계를 추진하여 길림성 또는 나아가 동북지역의 전면적인 대외개방의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장길도선도구의 건설은 하얼빈, 대경, 제제합지역과 요녕성, 흑룡강성 동부지역 및 내몽골 동부지역을 직접 상대함으로써 동북지역의 전면적인 진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 신흥 산업기지과 국가 식량안전기지 건설을 다그칠 수 있는 것이다.

두만강지역은 세계에서 성장잠재력이 제일 큰 경제구의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의 국제협력개발의 추진은 아세안을 향하고 있는 매콩강지역개발에 못지 않는 의의와 영향을 지니고 있으며 동북아국가들을 향하고 있는 창구이다. 그러므로 장길도개발전략의 초보적인 계획에 의하면, 길림성은 교통선을 축으로 분포된 두만강지역(연변주)과 장춘시, 길림시 이 2개의 특대형 도시와 연결하여 훈춘시를 개방의 창구로, 장춘시와 길림시를 직접적인 내지로, 해당 특색기능조합을 보충으로 하는 벨트를 형성하여 산업발전, 기초시설건설, 생태환경, 대외개방 등의 측면에서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동으로 향수하며 상호보완성으로 융합하여 서쪽으로 하르빈-대련간선과 연결하고 동쪽으로 동북동부통로와 연결하는 동북지역에서의 새로운 경제성장벨트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계획요강」은 중대한 의의, 총체적 요구, 장길도 개발개방 선도구를 가속 건설, 장길도와 국내지역간 역동관계를 적극추진, 두만강지역국제협력력을 힘껏 추진, 계획실시의 보장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계획요강」은 세 가지 중점 임무를 제시하였다. 즉, 장길도 개발개방 선도구 건설을 가속, 장길도와 국내지역간을 역동관계를 적극추진, 두만강지역국제협력력을 힘껏 추진하는 것이다.⁴⁾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장길도선도구내에는 크게 여덟가지 프로젝트를 건설할 계획이다.⁵⁾ 첫째, 두만강지역에 국제자유무역구를 설립한다. 1단계로 중·한·일·러간의 양자간, 다자간의 초국경 자유무역구를 건설하며, 2단계로 두만강지역국제자유무역구를 건설한다. 둘째, 장춘, 길림의 내륙통상구를 건설한다. 즉, 국제중계통상구인 장춘통상구를 구축하여 세관, 상품검역, 국경심사 및 해당 시설의 시스템화를 운영한다. 셋째, 과

4) 孫雷, “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上升為國家戰略吉林醞釀東北亞 ‘中部崛起’”, <http://www.sina.com.cn>

5) 鄒智威, 黃艷麗, “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規劃, 8月30日已獲批”.



학기술창신구(創新區)를 건설한다. 즉, 장춘의 국가생물산업기지와 광전자산업기지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하이테크 R&D센터와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 성급(省級) 국제협력산업구를 건설한다. 즉, 중한, 중일, 중러 등 초국경산업단지를 건설한다. 다섯째, 현대화된 물류단지를 구축한다. 즉, 장춘용가공항, 연길공항과 훈춘 등 통상구를 기반으로 보세가공, 보세물류, 보세창고 등이 집결하여 동북아지역과 동북지역을 상대로 하는 물류집산을 구축한다. 여섯째, 생태관광구를 건설한다. 일곱째, 고급서비스집중단지를 건설한다. 여덟째, 현대화된 농업시범단지를 건설한다.

장길도선도구건설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로 중국 대두만강지역의 주축인 중국-몽골의 대통로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장춘, 길림지역과 연변주를 포함하는 것이다. 중국-몽골의 대통로는 장길도 개발개방 선도구를 통과하면서 동북아지역 6개국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교량과 벨트이다. 이 통로가 건설되면 동북아에는 유럽을 잇는 또 하나의 운수통로가 형성되는 것으로서 두만강지역개발과 동북노공업기지의 진흥 프로젝트가 더한층 추진될 것이며, 나아가 동북아지역내의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동북아국가와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제일 짧은 통로가 될 것이므로 두만강지역개발을 하여금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게 하

는 것이다. 중국-몽골의 대통로건설에 있어서 주로 두개의 건설임무가 있는데 하나는 훈춘에서 북한, 러시아 항구간의 도로, 철도건설 프로젝트이며 또 하나는 내물공의 아이산과 몽골 파산간의 철도건설 프로젝트로서 '양산' 철도건설 프로젝트라고도 한다.

현재 장길도지역내에는 이미 일부 중점 건설공사가 착공되거나 준공되었다. 약 400km인 장춘-연길-도문 구간의 고속도로는 이미 착공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도문-훈춘간의 고속도로도 내년 말이면 착공될 것이다. 장춘-길림간의 도시간 철도건설도 금년에 착공하였으며 준공되면 양도시간의 거리는 30분간으로 축소된다. 장춘-도문 구간의 시속 200km이상의 고속철도프로젝트도 이미 길림성과 철도부의 협력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며 장춘, 길림의 내륙항구도 이미 초보적으로 완성되었고 훈춘 통상구 건설은 부단히 추진되고 있으며 러시아철도와와의 협력도 심화되고 있다.

VI. 두만강지역개발의 연변지역 입지와 협력방안

1. 두만강지역개발에서의 연변지역 입지와 역할

두만강지역의 핵심에 입지하고 있는 연변지역은 역시 동북아의 핵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연변지역은 장길도 개발개방 선지구 건설과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을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함에 도모할 수 있으며 동북아지역경제협력을 추진하고 동북아 국가들간 정상관계의 건립에 도모할 수 있다.

연변지역은 두만강지역 주변국을 상대하는 물류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8년간 추진된 두만강지역개발에서 연변지역은 유리한 지정학적 우세를 이용하여 중국 동부지역의 대외개방의 물류통로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중북, 중러간의 도로운수통로, 중러철도운수통로, 중한항공운수통로 및 초국경 해육운수통로를 개척하였으며 각 통상구의 통관수준을 제고시켰고 주변국들과의 경제무역교류를 활성화시켜 동북아지역 국가간의 자원 및 경제적 상호보완에서 중요한 중계역할을 하고 있다.

연변지역은 또한 중국 동북3성과 동북아국가들간 교류, 물류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창구이다. 연변지역은 동북아의 경제, 인구, 지정학 등 세가지 중심의 교차점으로서 아시아, 유럽, 북미주를 연결하는 육해운수통로의 중요한 중추위치에 입지해 있다. 따라서 장길도 개발개방 선구도는 물론 전반 동북지역은 연변지역을 통해 대외통로를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경제무역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다.

두만강지역개발의 특징과 연변지역이 두만강지역의 핵심입지, 지역우세와 자연부존 등 지정학적 우세로 인해 새로운 「계획요강」에서는 연변지역을 두만강지역협력개발의 핵심구와 국가주체 기능구 중점개발구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장길도 선도구 건설에서 장춘과 길림 두 도시경제가 두만강지역협력개발의 발전엔진과 동력원의 역할을 발휘시키며 연변지역과 장춘, 길림지역과 산업연대관계를 강화하고 장춘, 길림시의 자동차산업기지, 석유화학산업기지, 농산물가공기지 및 과학기술개발기지의 산업우세에 의거하여 하부연관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 두만강지역개발에서 연변지역의 협력방안

연변지역은 장길도 선도구건설의 전초지와 창구로서 두만강지역개발의 주요한 담당자이며 장길도 선도구의 산업분포를 조절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연변지역의 두만강지역 특수한 입지에 의해 지역내에 3개의 경제벨트를 구축할 것이다. 첫째, 중국-몽골 운수대통로의 경제벨트, 둘째, 중국동북지역의 동부철도통로의 경제벨트, 셋째, 국경선을 축으로 하는 경제벨트, 즉, 중조, 중러 국경선 및 해당 철도와 도로를 축으로 하는 연변주의 변경 경제벨트이다. 그러므로 장길도 개발개방 선도구건설 및 두만강지역개발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은 협력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연-룡-도 일체화의 프로젝트를 다그쳐 추진하여 길림성 동부지역 및 두만강지역에 핵심도시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경제학의 이론에 의하면 한 지역에는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핵심도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연변지역에는 연길시가 연변자치주의 행정도시로서 위치해 있지만 도시규모의 제약으로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도시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연변자치주 정부는 몇해전 부터 연-룡-도 일체화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이 지역에 핵심도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현재 「계획요강」의 비준을 계기로 연-룡-도 일체화의 프로젝트를 다그쳐 추진하여 두만강지역 핵심도시로서의 지역경제성장축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둘째, 훈춘을 동북아지역 협력개발의 중요한 창구로 건설하여야 한다. 훈춘시는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 실시를 계기로 세기 90년대 초에 이미 중국의 첫 변강개방도시로 비준되었으며 1992년 3월에는 국가급 변경경제협력구를 비준, 설립하였으며 또한 수출가공무역구, 중러 호시무역구도 설립되었다. 더불어 중국, 북한간 두만강변의 권하세관과

사토자세관 및 중국, 러시아간의 장영자세관, 철도세관 등 4개 통상구를 지니고 있어 장길도 선도구의 중요한 대외창구이다. 그러므로 훈춘시의 대외개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변경경제협력구를 비롯한 도시건설을 추진하며 중국-러시아간의 도로, 항구, 통상구건설 프로젝트와 중국-북한간의 도로, 항구의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중국-몽골 대운수통로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또한 장길도선도구 및 동북 3성의 대동북아지역 협력창구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환경보호의 원칙에 따른 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은 튼튼한 산업발전이 보장해 주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주도산업이 될 만한 제조업을 보유하지 못한 연변지역은 장길도선도구건설의 주요한 담당자로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외자원과 시장 및 국내자원과 시장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는 유리한 지정학적 우세를 바탕으로 러시아 에너지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 산업유치과정에서 현재 국제사회 환경보호의 거센 조류에 동참하여 녹색산업을 위주로 하는 산업을 유치하여야 하며 중화공업은 물론 경공업의 산업유치에서도 환경보호조치가 철저히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통상구경제와 변경관광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연변지역에는 중국-북한간의 훈춘 권하세관, 사토자세관, 도문세관, 개산툰세관, 삼합세관, 남평세관, 승선세관 등 7개 통상구와 중국-러시아간의 장영자세관, 철도세관 등 2개 통상구가 있어 풍부한 통상구경제발전의 자원을 지니고 있다. 이들 통상구가 장길도선도구의 대외통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만강지역 변경무역을 활성화시키는 통상구기반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풍부한 통상구자원이 있었기에 변경관광은 두만강지역 개발의 국제협력프로젝트로서 또한 유일하게 성공한 프로젝트 케이스이다. 따라서 보다 풍부한 변경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연변지역 기동산업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초시설을 더욱 완벽하게 건설하여야 한다.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연변지역내 종합적인 교통운수시스템이 완벽하게 하여야 하며, 한편, 연변지역의 대외통로, 성간(省間)의 통로를 중점으로 효율적인 교통네트워크를 형성시켜야 한다. 철도는 장춘-훈춘 구간의 고속철도와 화물운수철도의 복선건설 및 도문과 훈춘이 각각 북한과 러시아의 항구를 잇는 철도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도로는 훈춘-장춘 구간의 고속도로가 개통된 기초위에서 훈춘 권하(원정리)세관-라진항 구간의 고속도로, 훈춘 장영자세관-자루비노항-블라디보스토크항 구간의 고속도로, 용정팔도-삼합세관-청진항 구간의 고속도로건설을 추진하며 또한 연길-왕청 구간의 고속도로를 비롯한 지역내 도로

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공항은 연길국제공항을 이전시켜 보다 더 확대된 국제항공물류 통로로 건설하여야 한다. 한편, 각 통상구의 기초시설 및 통관능력의 확대건설하며 북한과 러시아 세관의 통관능력도 대등하게 하여 장길도의 '항구를 빌어 출해' 하는 전략의 활성화를 보장하여야 한다.

VII. 맺는 말

두만강지역개발은 지난 18년간 주변 국가들의 공동한 노력과 협력추진을 통해 두만강 지역 대외개방도의 대폭 확대, 산업기초시설의 개선, 운수통로의 형성, 변경관광업의 발전 등 분야에서 모두 일정한 성과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동북아의 복잡한 국제정치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특히 북핵문제가 두드러지게 국제적인 이슈가 되면서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두만강지역개발은 침체상태에 접어들기 시작하였고 북핵문제와 북한 미사일발사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현단계에도 여전히 침체상태에 처해 있다. 그러나 두만강지역개발은 여전히 개발의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변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 9월초 UNDP가 중국 장춘에서 소집한 두만강지역개발 제8차 정부간협조위원회 회의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 한국, 몽골 등 5개 성원국이 만장일치로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를 계속 10년을 더 연장한다고 결정하고 협력개발지역범위를 확대하여 대두만강지역개발(GTI) 시대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정부가 「광서북부만경제개발구발전계획」의 실시와 키퍼로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개발계획 요강-장길도를 개발개방 선도구로」를 비준함으로써 두만강지역개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국제사회 및 국내업계에서 주목을 받아 또 다시 90년대초에 일어났던 붐을 일구게 될 것이며 심지어 그때 보다 더 큰 열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18년간 추진해온 두만강지역개발의 경험을 총괄하고 새로운 전략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즉, 중국은 주동적, 술선적으로 두만강지역개발을 추진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경내를 포함한 운수통로기초시설건설, 산업유치 등 프로젝트에 본격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변국인 북한과 러시아에게 윈윈 의식을 점차 수립시켜 그들로 하여금 자각적으로 두만강지역개발에 참여하도록 유인하여야 한다. 연변지역은 장길도선도구의 대외창구로서, 중국-몽골 대운수통로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도시건설, 기초시설건설, 산업유치, 통상구건설, 변경관광 등 프

로젝트를 추진하여야 한다.

요컨대 두만강지역개발의 침체성은 일시적인 것이고 활성화는 다만 시간적인 문제라고 판단되며 그의 전망에 대해서는 반드시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두만강지역 개발은 동북아지역의 국제정세가 개선되고 더불어 중국이 두만강지역개발을 국가차원의 지역개발프로젝트로 추진하게 되어 두만강지역개발은 가속발전의 궤도에 들어 설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图们江区域合作开发规划·工业篇, 延边州委员会, 2008年7月17日.
- 韩兴漆, “新形势下图们江区域经济合作的发展对策”, 「东北亚论坛」, 2006,(6).
- 赵春子, “图们江下游流域近50年径流变化研究”, 「延边大学学报」, 2008,(4).
- 朱显平, “中俄能源合作及对东北亚区域经济的影响”, 「东北亚论坛」, 2004,(2).
- 金向东, 金奇宪, “图们江地区开发开放再度升温”, 「东北亚论坛」, 2008,(4).
- 课题组, “大图们江区域合作开发战略的思考”, 「社会科学战线」, 2006,(3).
- 课题组, “大图们江区域国际合作开发问题研究”, 「东北亚论坛」, 2006,(4).
- 孙永祥, “俄罗斯东西伯利亚和远东地区开发前景及我国应采取的对策”, 「当代石油石化」, 2006,(4).
- 郭文君, 「图们江区域合作开发中延边经济发展战略研究」, 延边大学博士学位论文, 2009.
- 李钟林, 王国臣, 崔文, 李天国, 「大图们江地区开发」, 延边大学出版社, 2006.5.
- 孙雷, “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上升为国家战略吉林酝酿东北亚‘中部崛起’”,
<http://www.sina.com.cn>.
- 邹智威·黄艳丽, “「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规划」8月30日已获批”,
http://www.xwhb.com/news/system/2009/09/01/010056141_02.shtml.
- 石明山, “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打造东北新增长极”, 「科学时报」, 2009.9.21.

한국기업의 요녕성 진출 현황과 활성화 방안

우영자(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 부연구원)
yyz820@hanmail.net

올해로 중·한 수교 19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수교 당시 63.7억달러에 불과했던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2010년 2,071.7억달러에 이르러 거의 33배 증가하였다. 아울러 양국간 인적교류나 상호투자 또한 장족의 발전과 성과를 이룩했다.

1992년 중·한 수교이후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상대적으로 기업환경이 좋았던 북경, 천진, 청도, 상해, 광주 등의 동부 연해발전지역에 편중되어 왔으며 동북지역의 경우에는 대련을 제외하고는 한국기업의 관심 및 진출이 상당히 미진했었다. 하지만 최근 년간 중앙정부의 동북공업지역 진흥전략을 바탕으로 동북3성의 평균성장률은 전국을 웃도는 13%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요녕연해경제지역 개발, 심양경제구 개발계획, 장길도 계획 등이 구체화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산업기반, 인프라, 인적자원이 동북3성 중에서 월등한 요녕성은 한국대기업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투자분야도 기존 제조업중심에서 서비스, 금융, 녹색산업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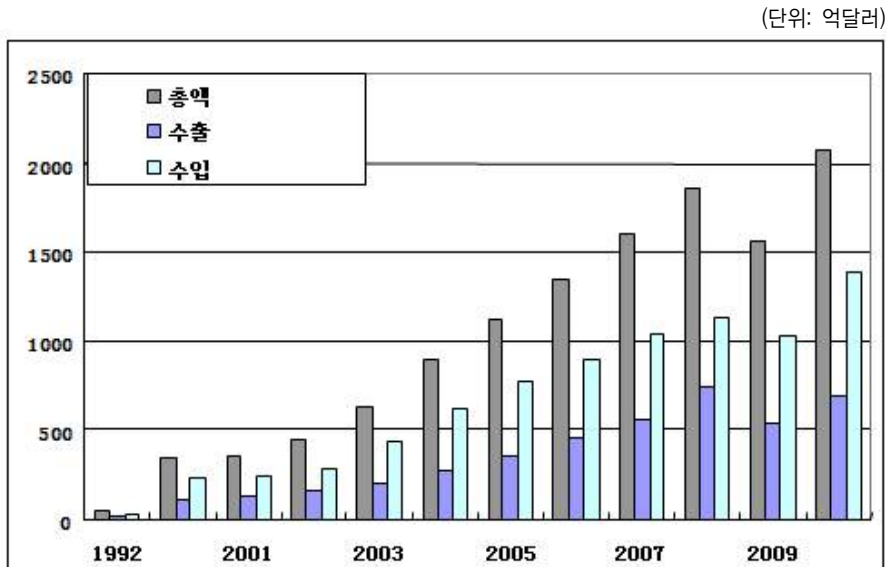
본고는 최근 년간 중·한 경제협력 현황, 한국기업의 대요녕성 진출 실태와 요녕성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개발정책 등을 살펴봄에 한국기업의 대요녕성 진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중·한 경제협력 현황

1. 교역현황

1992년 63.7억달러에 불과했던 중·한 교역은 2008년까지 고속성장을 이어 오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는 전년대비 16.3% 감소한 1,558억달러에 머물렀지만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면서 2010년에는 2,071.7억달러라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의 제3위의 무역상대국이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다.

표 1 | 중국의 대한국 교역 현황



※자료: 중국 상무부

2.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상황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은 1992년 중·한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52억달러로 가장 많은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은 상대적으로 기

업환경이 좋았던 중국 동부 연해 지역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는바 투자액의 약 90%, 그리고 전체 기업체 중 88%가 산둥성, 강소성, 북경, 요녕성, 천진, 상하이, 광둥성, 절강성 등 8개 성시에 집중되었다. 투자액과 투자기업의 약 3/4이 제조업이며 나머지는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건설 및 부동산업 등이 차지하고 있다. 기업규모로는 대기업이 전체 기업수의 약 7%를 점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55%, 나머지를 개인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이 차지한다.

그러나 2008년 이후 한국 중소기업들이 대거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투자액도 크게 줄어들어 2009년에는 27억달러에 머물렀고 2010년에도 26.93억달러로 큰 회복세는 보이지 않았다.

표 2 | 한국의 대중투자

(단위: 억달러, 건)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누계
금액	51.68	39.0	36.8	31.35	27.0	446.1
건수	6,115	4,262	3,452	2,226	1,609	50,477

※자료: 중국 상무부

한국 중소기업의 철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최근 중국의 거시적인 정책 변화 및 외국인 투자환경변화가 한국 중소기업 철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노동계약법 실시에 따른 인건비 상승 (고용환경의 변화)

2008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 노동계약법으로 인해 기업마다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혜택에 대한 부분도 강화되었다.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유지해 온 노동집약형인 한국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어 철수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일부 노동집약형 기업의 경우 노동계약법 실시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거의 30%에 달하였다.

세제개혁에 따른 원가 상승

기업소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13% 수준의 우대세금을 내던 외자기업이 이제는 내국인기업과 마찬가지로 25~30%를 지불하게 되었고, 그만큼 이윤이 감소된다.

저부가가치 가공무역에 대한 수출환급제도 하향 조정하였다. IT제품, 바이오제품 등 첨단제품에 대한 환급율은 높이고 방직, 피혁, 철강재 등은 수출증치세 환급율은 낮추거나 환급을 폐지하였다.

- 인민폐 절상에 따른 수출 기업의 경쟁력 하락
- 외자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변화
- 2007년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

II. 요녕성과 한국간 경제협력 현황

1. 교역현황

한국과 동북3성간 무역규모는 2009년 말 기준 73억달러로 한국의 대중교역 전체 금액의 4.7%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동북3성의 교역액 중에는 요녕성의 비중이 수출의 90%,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등 동북3성 무역액중 약 85%를 차지한다.

요녕성과 한국간의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49.4억달러이던 교역액이 2008년 84.1억달러로 3년 사이에 70%나 급증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9년의 경우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한중교역액이 감소한 결과 요녕성과 한국간 교역액 역시 전년대비 29.5%가 줄어든 59.3억달러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 요녕성의 대한민국 교역 현황

(단위: 억달러)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액	24.2	28.5	33.9	42.8	49.4	56.3	71.2	84.1	59.3
수입	13.5	15.8	18.3	19.7	20.6	22.6	25.2	28.1	26.0
수출	10.7	12.7	15.6	23.1	28.8	33.7	46.0	56.0	33.3

※자료: 중국통계출판사, 『요녕통계연감』, 각연도.

2. 한국기업의 요녕성 진출현황

(1) 투자규모

한국의 동북3성 전체에 대한 투자규모는 2009년 말 기준, 총액으로 약 34억달러이다. 이중 80%가 요녕성에 집중되어 있다. 길림성과 흑룡강성은 요녕성의 1/10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요녕성에 비해 크게 뒤져있다. 길림성과 흑룡강성이 요녕성에 비해 투자와 무역규모에 있어 크게 뒤지게 된 것은 요녕성이 교통, 물류, 인적자원 등 한국기업 투자 환경이 월등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국의 대요녕성 투자는 2008년 16.2억달러를 상회하다가 2009년에는 다소 감소한 15.6억달러에 그쳤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불황, 중국의 새로동법 실시 및 인건비 상승 등 기업환경의 변화로 제조업 위주의 일부 로동집약형 중소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기지를 동남아지역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연간 동북진흥 정책 실시를 바탕으로 요녕연해지역, 선양경제구, 료서북진흥 등의 개발정책들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대기업들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4 | 요녕성내 한국기업의 투자현황

(단위: 백만달러, 건)

연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누계
금액	79	264	514	936	984	1,622	1,561	2,157
건수	536	574	839	618	507	343	352	2,822

※자료: 중국통계출판사, 『요녕통계연감』, 각연도.

(2) 한국기업의 대요녕성 지역별 투자동향

한국기업의 대요녕성투자는 주로 대련과 선양에 집중되어 있다.

동북의 해상관문이자 대외개방과 국제화 속도가 가장 빠른 대련에는 동북3성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한국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 한국과의 물류조건이 우수해 가공수출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많으며 의류, 섬유제품, 신발, 약기 등 경공업으로부터 철강, 전자, 기전제품 등 다양한 업종이 진출해 있다. 최근에는 대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종과 관련된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다.

동북 육로교통과 유통 중심지인 심양에는 내수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LG전자, 태평양화장품, 농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밖에 소매, 유통, 가스충전소 등 내수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한국기업들이 진출되어 있다. 심양은 대련보다 인구가 많고 주변 배후도시가 발달되어 있는데다 인건비, 지가, 물가수준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며 여기에 선양시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을 배경으로 최근 수년전부터 한국기업들의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단둥, 영구, 무순, 안산 등지에는 섬유, 잡화 등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의 투자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단둥 동양그룹, 안산의 조선내화, 무순 쌍용중공업 등을 들 수 있다.

표 5 한국기업의 대외별 투자사례

지역	업종	대표적인 투자업체	업종	대표적인 투자업체
대련	전자	광전자, 팬택, 현대LCD	전기, 기계	LS산전, 한라공조, 포스콘동방
	철강	POSCO, 세운철광	신발	풍원제화, 화승제화
	섬유	대우텐트, 파크랜드	수산	대림수산
	화학	삼영화학, 한솔	약기	콜텍, 대원약기, 동방약기
	조선	STX, 두산중공업, 오리엔탈정공	기타	고령용접봉, 진도컨테이너, 맥선, 한라시멘트, 아시아시멘트
선양	전자	LG전자, 중광전자, 우성전자, 우영전자	섬유	신원침직, 동방방직
	유통	메가마트, 롯데마트	식품	농심
	화장품	아모레화장품	부동산개발	SR개발
	자동차부품	통일중공업, 금배광진	레미콘	한라시멘트
	도로건설	극동공로공정(고속도로관리공단)	가스사업	SK가스
단둥	농기계	동양기계		
	양식기	동양물산		
안산	내화제품	조선내화		
무순	디젤엔진	쌍용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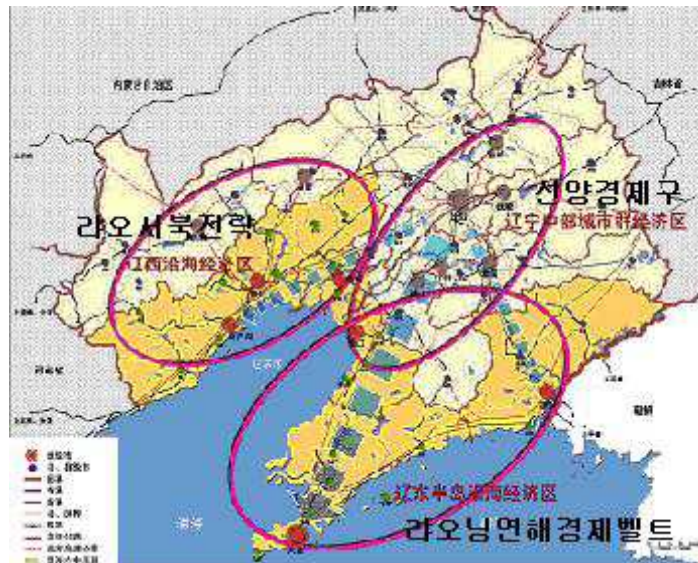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동북3성 진출실무가이드』, 2010.

III. 요녕성의 발전전략과 투자유치정책

1. 요녕성의 3대 지역개발전략

12.5시기 요녕성의 지역발전계획은 2010년 초에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 명시한 요녕성연해경제벨트, 선양경제구(瀋陽經濟區), 요서북전략(遼西北戰略)을 중점으로 추진될 것이다.

그림 1 | 라오닝성 3대 지역개발사업



2009년 7월 중국 국무원은 요녕성 정부의 「요녕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승인하였다. 요녕연해지역은 황발해지역에 인접되어 있고 대련, 단둥, 금주, 영구, 판진, 후루도 등 6개 연해도시를 포함하고 있다. 육지면적은 5.65만km², 해안선 길이는 2,920km, 해역면적은 6.8만km²이며 2009년 말 통계를 기준으로 1,77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요녕연해지역개발의 총체적인 발전계획은 <일핵, 일축, 양익(一核 一軸 兩翼)>의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일핵>은 대련을 핵심으로 동북아해운센터 및 물류허브를 건설하며, <일축>은 <대련-영구-판진>을 주축으로, <양익>은 발해의 <판진-금주-후루

도)와 황해의 <대련-단동 황해연안과 주요 섬들>의 발전을 도모하며 선진장비제조업, 원자재공업, 전자생물 등 하이테크산업, 현대서비스업, 현대농업을 주요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2009년 요녕연해지역 6개 도시의 GDP는 요녕성 전체의 58.3%, 지방재정 일반예산 수입은 요녕성 전체의 46.9%, 고정자산투자는 요녕성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심양을 중심으로 하는 심양경제구는 도로인프라 건설을, 요녕성의 낙후지역인 요서북 지구는 우수한 생태조건을 활용한 친환경 건설을 중점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요서북지역은 수자원 공급과 관련된 건설항목을 추진, 지역 내 홍수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2. 투자유치 정책방향

외국인 투자를 기존의 가공산업 및 부동산 산업위주에서 인프라, 하이테크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요녕성은 산업구조 및 경제분포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구조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개방확대, 금융개방 확대 등 그동안 규제되었던 외국인 투자활동영역의 범위도 점차 개방하고 있는 추세이다.

3. 투자 유치분야

요녕성은 6개 외국인 투자중점 유치분야를 지정하여 장려하고 있다.

표 6 | 요녕성의 중점 투자유치분야

분야	업종
기간산업 분야	석유화학, 제련, 기계, 전자
첨단산업 분야	IT, 자동화설비, 신소재, 생명공학 및 제약
농업 분야	식량, 목축, 농수산물, 과일, 임산물의 생산과 가공
사회간접자본 분야	항만, 도로, 통신, 수자원개발, 관광설비 건설
환경산업부문 분야	오수 정화, 폐기물 처리
서비스업부문 분야	상업, 무역, 관광, 건축업

IV. 요녕성과 한국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요녕성은 환발해지역의 가장 역동적인 경제발전지역으로서 자원이 풍부하고 공업기반이 튼튼하며 해상, 육상 및 항공 등 제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중국 내는 물론 주변의 한국, 몽고, 러시아, 북한 등 국가들과 짧은 시간과 낮은 비용으로 내왕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물류상의 강력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진흥을 실현하기 위해 요녕성의 차원에서는 양질의 외자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며 외국기업의 차원에서도 요녕성의 일련의 지역개발전략과 정책은 더욱 많은 투자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차원에서는 요녕성에 대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주로 아래와 같은 분야를 선정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요녕성 정부가 동북진흥정책의 성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SOC건설 등을 중심으로 가능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이다.

둘째, 요녕성이 갖고 있는 기존의 비교 우위산업, 이를 테면 석유화학, 기계장비, 철강, 조선, 섬유 등 분야에 대한 진출이다.

셋째, 현대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이다. 현재 요녕성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있는 중이다. 원활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물론, 농촌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도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시켜야 한다. 금융업, 유통업 그리고 관광업(최근 요녕성은 중국 최대의 온천관광산업육성 계획 발표, 2015년까지 1,500억위안 투입 예정) 등이 그 대표적인 업종이다.

넷째, 녹색성장 산업에 진출이다. 녹색성장은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자는 패러다임이다. 요녕성 정부도 이미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풍력발전, 환경산업, 녹색도시 건설 등이 될 수 있다.

요녕성 정부 역시 성공적인 한국기업 유치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층 적극적인 대외개방 마인드를 수립하고 둘째, 지속적인 교통망 정비와 물류망 개선에 경주해야 하며 (청도의 경험을 참조하여 연해 항만과 한국간 해상, 육로 연결시키는 물류시스템 구축-海陆联运快捷通道) 셋째, 녹색성장 산업투자에 대해서는 IT 산

업 등 첨단산업에 준한 세제 및 금융혜택 등을 부여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더욱 많은 양질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세계금융 등의 문제와 함께 고용과 노사관계의 안정 보장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경제자료

» 최근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43

최근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2000년대에 들어 남한내에서 북중 경제협력 확대 추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북중간의 무역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북중무역 규모는 34억6,568만달러로 2000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투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08년도 중국의 대북 FDI 규모는 41.23백만달러로 전세계의 대북 FDI의 93.7%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최근 북한은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대풍그룹은 중국 투자자들을 이끌고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물론 그 실적이 전무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최근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닉슨센터(Nixon Center)의 Drew Thompson 연구원은 북한내 중국기업의 진출 현황을 조사·발표하였다. 보고서에는 북한에 138개 중국기업이 진출하여 협력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윤을 내기 어려운 투자 환경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의 대북투자 의도가 북한 및 한반도 관리의 측면이 강하다는 내용 등을 담아내었다.

본 자료는 Drew Thompson의 보고서 「침묵의 파트너: 북한내 중국의 합작기업(Silent Partners: Chinese Joint Ventures in North Korea)」의 요약본을 정리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북중간의 무역 및 투자 실태를 정리해 수록하였다.

정리: 이원경 연구원
(wklee@kdi.re.kr)

1. 침묵의 파트너: 북한내 중국의 합작투자 (Silent Partners: Chinese Joint Ventures in North Korea)

(Drew Thompson)

서론

중국은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로 여겨져왔다. 그동안 중국의 대북원조, 무역, 투자는 북한의 사회 안정과 경제적 생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북한의 경화 획득과 기술의 주요 원천이었다. 중국의 대북무역과 투자는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 주는데 특히 중요한데, 이는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가 단절된다면 김정일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엘리트층의 충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합작투자는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주기도 하지만, 낙후된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북중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측면이 있다. 중국의 대북 금융투자는 중국의 전략적 이득 뿐만 아니라 남한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 반면에, 북중간의 경제적 관계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도발에 대해 제재를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든다.

중국의 대외적 관심과 북한

중국의 대북투자는 중국이 갖고 있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관점과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역할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대북관계는 '강대국' 이 되기 위한 주요한 노력이고 대북투자는 '세계진출' 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투자가 공산주의 이념이나 한반도에 대한 재패전략에 따라 정치적으로 주도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오히려 대북투자 및 대북무역은 중국의 국경지역과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해주고, 북한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북 합작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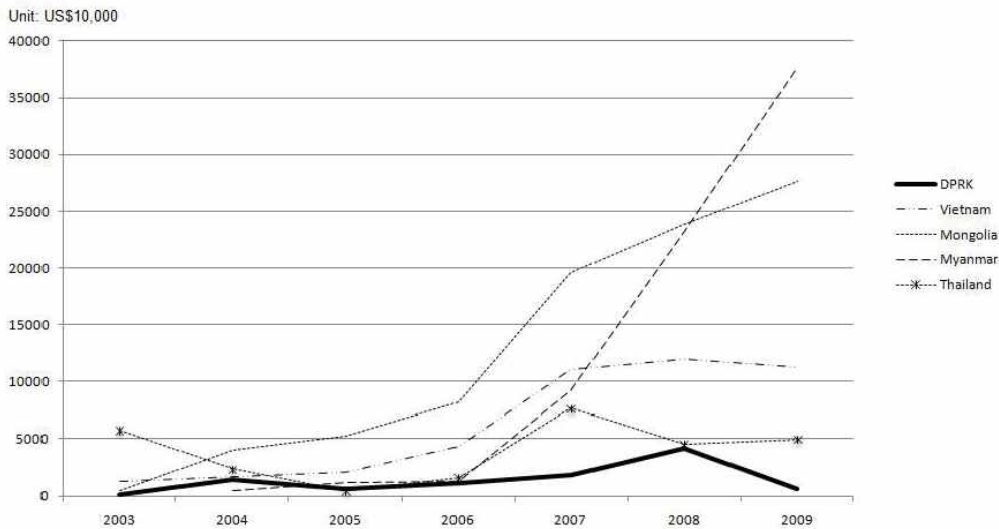
중국의 대북 투자 프로젝트는 중국의 인접국가에 대한 투자와 비교했을 때 규모도 작고, 성공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의 대북투자는 9,830만달러였지만, 대한국투자는 12억달러, 대태국투자는 2억7,300만달러, 대베트남투자는 4억3,700달러, 대미얀마투자는 7억2,980만달러, 대몽골투자는 8억9,070만달러였다. 중국 투자자들은 대북투자에 있어서 지대추구, 부족한 인프라, 억압적인 정치환경 등의 문제가 특히 대북투자를 어렵게 한다고 전하고 있다.

표 1 | 중국의 연도별 대북투자

(단위: 백만달러)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액	1.12	14.13	6.5	11.06	18.4	41.23	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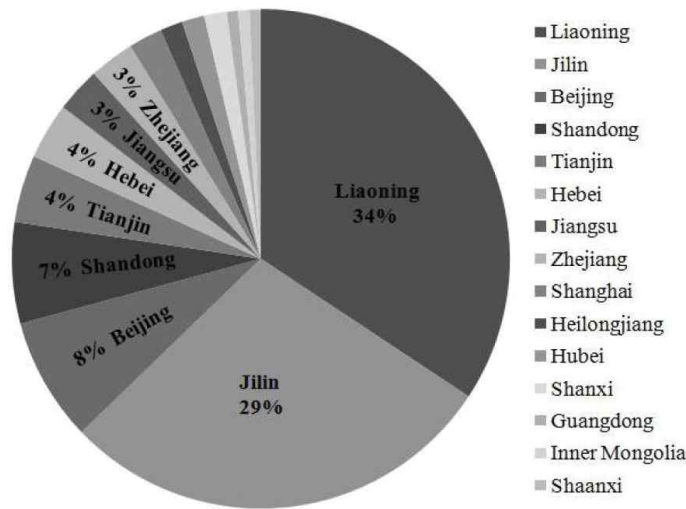
그림 1 | 2003~2009년 중국의 국가별 대외 FDI 흐름



중국의 상위 100개 기업 가운데 대북투자 기업은 단지 두 개 기업뿐인데, 이 두 기업 모두 제철업체이다. 투자 기업 가운데는 난징판다(Nanjing Panda), 차이나 민메탈스(China Minmetals), 완샹(Wanxiang)과 같이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소규모 기업들도 있지만, 중국의 대북투자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또한 이들 대북투자자 중 대부분은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국영기업이 아니라 개인회사 및 성, 주, 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다. 합법적인 투자자라고 인식되는 138개 기업 중 4개의 기업만이 중앙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1997년부터 2010년 4월까지 138개의 합작기업이 설립되었고, 이중 41%는 채취산업, 38%는 경공업, 13%는 서비스 그리고 8%는 중공업 분야에 대한 투자형태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지정학적으로 북한에 접한 길림성과 요녕성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 기업의 28%는 길림성에, 34%는 요녕성에 기반하고 있고 나머지는 베이징, 산둥, 상하이 등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길림성과 요녕성은 북한과의 국경 1,400km에 맞닿아 있고, 점점 해외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북한과의 인접성을 이용한 경제적 이득 획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지역에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약 100만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문화적 혜택을 얻고 있다.

그림 2 | 중국의 대북 투자 기업의 지역별 분포



북한은 중국이 제공한 경제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진흥계획의 궁극적인 성공은 바로 북한의 개혁·개방의 성공적인 출발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지 분석가들은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개혁·개방된 북한 시장으로 인해 북한 접경 지역이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길림성 연변시와 요녕성 단동시는 북중 국가간 무역을 촉진시키고, 북한 접경 지역에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 중국의 동북지역이 장기간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좀 더 합리적인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북투자과 중국의 정책

일반적으로, 대북투자를 하고 있는 요녕성과 길림성의 중소기업들은 사업 성공을 위해 중국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중국과 북한사이에서 조용한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한반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경우, 이들 회사는 그들의 조심스러운 접근 태도를 바꿀 것이다. 사업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회사들처럼 중국의 대북 투자기업들도 강경하게 대응하여 중국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그들의 투자가 중국전체의 투자규모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업과 지역차원에서의 발생손실은 클 수 있다. 또한 일부 중국의 투자자는 성이나 성 이하의 정부부처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투자의 손실은 지역정부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과 접경한 북한 지역은 북한의 경제활동이 붕괴된다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중국 접경 북한 지역은 북한에 씌어진 국제적 오명 때문에 이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중국 동북지역은 베이징에서 원거리에 있을 지라도 다양한 관료적인 메커니즘과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위협의 상황이 발생하면 베이징도 동북지역의 이득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북투자과 무역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인 관점과 일치한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국가적인 이득은 안정적인 지역 안보 환경을 유지하고,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동북지역의 경제 발전을 증진시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중국은 무역, 원조, 투자와 같은 양자간 관계와 6자회담 같은 다자간 관계를 통해 경제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중국과 북한간의 견고한 경제적 관계를 구축시키는 것은 중국의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것은 중국의 사업에 가져올 이득 때문만이 아니라, 무역과 투자는 체제 안정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북한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중국의 관료들과 분

석가들은 만약 북한이 내부적인 안정성과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핵 무기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대북투자자는 북한정권의 체제 안정에 잠재적으로 간접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자와 지정학적 전략의 균형

‘상호 불신’은 북중 관계,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계를 특징 짓는 것이다. 북한은 무역, 원조, 투자를 위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채취산업, 특히 채굴부분에서 중국투자에 종속되어 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우방국이 없고, 중국보다 큰 무역파트너나 투자국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북쪽에 인접한 중국과 관련을 맺을 수 밖에 없다. 중국이 전세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상당한 경험과 충분한 자본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당면하게 될 위험보다는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덜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남한과의 관계개선은 북한체제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이데올로기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엄격한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개혁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전수한다. 중국의 합작투자사들은 중국의 개혁 경험을 전달하고 북한을 대외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게 유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켜주면서 점차적인 개혁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는 또한 먼 미래에 합의된 남북통합의 가능성을 증진시켜 줄지도 모른다.

중국의 대북투자자는 중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치 수단의 폭을 좁히고 불분명한 책임감을 갖게 한다. 제재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 도구일지라도,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재 적용이 불편하다. 중국의 대북투자자는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중국정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대북제재가 중국기업에 손실을 주고, 중국정부와 북한정부간에 존재하는 모든 신뢰를 약화시키며, 개혁과 개방이 필요하다는 중국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북투자자들이 이 지역의 미묘한 안보 균형을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평가를 할 때, 중국의 대북투자자가 마찬가지로 극적이라고 표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외투자자는 중국을 변화시킨 것처럼 북한 엘리트와 노동자들을 점진적으로 변화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북지역 및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북한의 개방에 일정 역할을 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지면 투자의 성공적인 물결은 북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환경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북한 스스로가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중국의 투자 증가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2. 최근 북중 경제협력 실태 및 사례

가. 무역 및 FDI 현황

- 2010년도 북중간의 무역액은 1998년 대비 약 8.5배 증가
 -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1998년 51.1억달러 대비 약 2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대중국 수입액은 6배 증가

표 2 | 북중 무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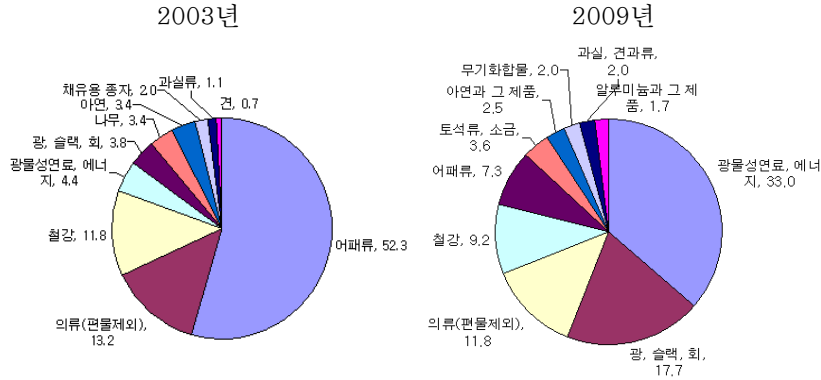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년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
1998	51.1	356.7
1999	41.7	328.6
2000	37.2	450.8
2001	166.8	570.7
2002	270.9	467.3
2003	395.5	628.0
2004	582.2	794.5
2005	496.5	1,084.7
2006	467.7	1,231.9
2007	581.5	1,392.5
2008	754.0	2,033.2
2009	500.6	1,209.6
2010	1,187.9	2,277.8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3년 당시 어패류 수출에 집중되던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이 2009년도에 광물성연료, 에너지 등으로 변화

그림 3 | 북한의 대중 주요 수출품의 비중 변화 추이(2003/2009년)



자료: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 해당년도.

표 3 | 북한 FDI유입 중 중국의 비중

(단위: 백만달러,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FDI(해외→북한)	158	40	50	-105	67	44	2
FDI(중국→북한)	1.12	14.13	6.5	11.06	18.4	41.23	5.9
중국비중	0.7	35.3	13.0	-	27.5	93.7	-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중국 상무부, '중국상무연감 2010'.

표 4 | 중국의 대아시아 및 대남북한 FDI 현황

(단위: 백만달러,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아시아(A)	1,505.03	3,013.99	4,484.17	7,663.25	16,593.15	43,547.50	40,407.59
북한(B)	1.12	14.13	6.50	11.06	18.40	41.23	5.86
(비중(B/A))	(0.07)	(0.47)	(0.14)	(0.14)	(0.11)	(0.09)	(0.01)
남한(C)	153.92	40.23	588.82	27.32	56.67	96.91	265.12
(비중(C/A))	(10.23)	(1.33)	(13.13)	(0.36)	(0.34)	(0.22)	(0.66)

자료: '중국상무연감', 2010.

나. 북중 주요 투자협력 실태¹⁾

1) 자원개발 분야

■ 중국의 대북투자의 대부분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

표 5 | 2004~2009년 중국의 북한 광물자원 투자개발 및 채굴권 확보 현황

지역		광산	체결시기	종류	투자금액
함경북도	온성군	강안탄광	2005.7	갈탄	
	회령시	오룡광산	2006.5	철	3.16억위안 (543억원)
	무산군	무산광산	2006.11	철	1억위안 (172억원)
함경남도	덕성군	덕성광산	2004.3	철	1억달러 (1,165억원)
	장진군	장진광산	2004.5	몰리브덴	240만유로 (20억원)
	허천군	상농광산	2004.8	금, 동	
양강도	보천군	보천탄광	2006.9	금	2,000만위안 (344억원)
	해산시	해산청년광산	2008.11	동	4,400만위안 (756억원)
	갑산군	8월광산	2006.9	동	1,000만위안 (17억원)
	갑산군	문락평광산	2006.4	철	1억위안 (172억원)
평안북도	의주군	덕현광산	2007.3	철	6억위안 (1,032억원)
	구장군	룡등탄광	2005.10	무연탄	
	구장군	룡문탄광	2005.10	무연탄	
	의주군	덕현탄광	2007.3	철	
평안남도	신천군	신천탄광	2006.4	금, 은	
	순천시	2.8직동청년탄광	2005.4	무연탄	
	은산군	천성청년탄광	2005.4	무연탄	
	성천군	룡흥탄광	2007.9	몰리브덴	443만달러

1) 중국 정부와 성 차원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투자(선도구전망계획요강 관련 100개 중점건설대상 등) 등 북중간의 주요 투자협력 실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8월호 참조.

지역		광산	체결시기	종류	투자금액
					(51억원)
황해남도	웅진군	웅진광산	2008.6	철	3,000만유로 (516억원)
황해북도	은파군	은파광산	2006.3	연, 아연	3.5억위안 (602억원)
	수안군	수안광산	2007.1	금	

주: 투자금액이 확인된 프로젝트만 정리, 원화는 체결당시의 환율로 계산

자료: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재편집

- 국감보도자료(2009.10.23)
- 2009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문화일보」, 2009.10.8
- 윤병수·동애영,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0.3.26, p16.

2) SOC 분야

■ 자원개발 분야 다음으로 집중되는 투자사업이 북중간 항만, 도로, 철도의 연결과 북한내 각 시설의 개보수 사업

- 대부분 북중 국경을 연결하는 투자사업에 집중
- 이러한 인프라 구축사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동북 3성 진흥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대한 연계개발을 목적으로 진행

가) 항만 및 권역 투자

■ 나진항

- 2005년 9월 중국 훈춘시와 라선시간에 ‘도로·항만개발구 일체화’ 사업추진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면서 가시화
-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조중 우호 60주년’을 맞아 방북하여 북한과 ‘5개년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여 20억달러 상당의 경제원조와 투자에 합의
-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직후인 10월 7일 중국은 북한의 나진항 1호 부두의 2,3호

정박지를 보수, 확장하는데 2,000만위안을 투자하면서 4호 부두를 신축하여 10년간 독점 전용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나진에서 원정리까지 67km의 도로를 폭 9m의 4차선도로로 확장해 주기로 합의

- 중국은 2009년 6월 중국 요령성 대련창력경제무역유한공사의 계열회사인 훈춘창력해운물류유한공사와 북한의 나진 강성무역회사와 합영으로 나진항 1호 부두의 석탄운송을 위한 현대화 사업과 인근 비료 증개창고 8,100m²를 석탄창고로 개조하는 작업을 완료

■ 청진항

- 2010년 5월 중국의 연변하이화(延邊海華)무역공사가 청진항 3·4호 부두의 15년 사용권을 추가로 확보
- 청진항 항로를 운항할 연변 하이화(海華)무역공사는 이미 2,000만위안을 투자, 청진항에서 화물 선적용 대형 크레인과 투먼~청진을 운행할 200량의 화물열차 제작 추진

■ 단천항

-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2010년 6월에는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 수출 항인 단천항 개발(항만 보수)과 이용권 협상이 북한과 중국간에 마무리 된 것으로 파악

나) 특구 개발 및 기타 사업

■ 위화도 및 황금평 개발

- 북한은 단동과 접경한 압록강 섬인 위화도와 황금평을 자유무역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중국의 2개 기업에 각각 100년 임대 형식으로 개발권을 부여하고²⁾ 중국은 황금평(11.45km²)에 5억달러, 위화도(12.2km²)에 3억달러를 각각 투자

2) 애초, 이 지역은 50년 기간으로 임대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중국의 임대기간 연장을 북한이 수용하여 100년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 2010.2.23; '한국일보', 2010.10.28.

■ 백두산관광단지 개발

- 중국의 민영기업인 대련만달그룹, 중국범해그룹, 내몽골역리자원그룹, 요녕일방 그룹은 약 200억위안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30km², 건설용지 약 10km² 규모의 백두산관광단지를 개발하기로 북한과 합의하고 2009년 8월 28일 착공식을 진행

■ 압록강대교 건설

- 2009년 10월 4일 북한 김영일 내각 총리와 만나 단동의 랑터우항과 남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대교(中朝鴨綠江界河公路大桥)’ 를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북·중 경제기술 합작 협정서를 체결
 - 2010년 2월 25일 「조선정부와 중국정부사이의 압록강 국경다리 공동건설과 관리에 관한 협정」이 단동에서 정식 체결
 - 건설비 10억위안(약 1,720억원)은 중국이 전액 부담

■ 기타 시설 투자

- 중국의 요화유리집단공사가 무상원조 형태로 진행된 남포의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 및 운영지원,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근대화, 북중합작 철도회사 발족
- 나진 국제교역단지 조성, 남포항 개발, 남포 보세구역 개발, 압록강변 발전소 공동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투자 프로젝트가 추진 중

표 6 | 중국의 대북 서비스분야 투자 현황

진출년도	관심회사	주요내용	비고
2004.6	조선울림운수 합영회사	중국 낙청성금괘속서비스유한공사와 북한의 선울림회사간의 국제여객버스운행(중국 온주 상인 투자)	합영
2005.4	절강성의 동양국호무역유한회사	조선철명무역회사와 절강상품판매시장(평양 제1백화점 3개층 총면적 15,000평방미터)의 공동운영	생활잡화와 의류 등 판매(심양 중육집단 투자방기후 진출)
2005.6	요령대성국제무역유한회사, 단동환구실업발전수출입유한회사 등 4개사	무역성 산하 중앙수출입물자교류총회사와 보통강수입물자교류시장 공동운영	수입물자판매(100만달러 투자)

진출년도	관심회사	주요내용	비고
------	------	------	----

자료: 배중렬,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EU와 중국 기업의 대북진출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08년 가을호.

3) 제조업 등 기타 분야

- 제조업을 포함한 기타 분야에 대한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은 자원 및 SOC 관련 투자에 비해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음.
- 2004년 중국 북경중합화학무역공사는 북한 상명무역총회사와 합작하여 어업생산제휴 프로젝트를 맺고 원양어선 총 18척에 대해 2009년까지 원산 근해에 대한 입어료의 명목으로 어획고의 25%를 전자제품 등 현물로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
- 2005년 8월에는 대련해양어업집단, 주산화응원양어업공사, 주산보다구원양어업공사가 북한 삼태성무역회사와 합작하여 동해안 어업개발프로젝트를 맺고 5년간 원양어선 총 60척을 투입하는 사업 실시
- 2006년 5월 요령성 격림투자유한공사는 문악발전소³⁾ 건설을 위해 4,5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금은 전력으로 상환하는 내용의 발전소 건설 사업도 추진

표 7 | 제조업 등 기타분야

설립년도	투자회사명	투자당사자	방식	생산품(특기사항)
2004.5	조선영초건재품 합영회사	중국: 장춘영초과기책임유한공사 북한: 건설건재공업성 건재무역회사	합영 (50:50)	석면스레트 (돌숨지붕판)
2004.6	조선올림운수 합영회사	중국: 낙청성금괘속서비스유한공사 북한: 조선올림회사	합영	국제여객버스운행 <중국 온주 상인 투자>
2004.6	영광가구 합영 회사	중국: 길림성 중상무역대외수출입총회사 북한: 건설건재공업성 대외경제협조국	합영	각종 고급가구 <영광 가구건재종합센터 개 업: 2006. 6>
2005.10	평양전기기구 합영회사	중국: 베이징복성효정전자과학기술주식회사 북한: 카드식적산전력계조립공장	합영	카드식적산전력계
2005.10	평진자전거 합 영회사	중국: 천진디지털무역책임유한공사 북한: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영 (51:49)	자전거
2006.4	조선은풍 합영 회사	중국: 요령성 화풍목업주식유한회사 북한: 조선은파산무역회사	합영 (55:45)	사료첨가제 (북합영양 첨가제)
2008.3	평양아명조명 합영회사	중국: 상해아명전등공장유한공사 북한: 평양조명기구공장	합영	컴팩트 등(절전형 등 생산)
2008.4	평양백산연초 유한책임회사	중국: 길림성담배공업유한회사 북한: 조선연초수출입상사	합영 (51:49)	담배생산

주: 실제 조업이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

3) 본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4.2만kw, 연발전량은 1억6천kw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립년도	투자회사명	투자당사자	방식	생산물(특기사항)
------	-------	-------	----	-----------

자료: 배종렬,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EU와 중국 기업의 대북진출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08년 가을호.

부문별 주요기사

— 대내경제	61
— 농업 및 식량	65
— 대외경제	68
— 남북경협	72

부문별 주요기사(3.1~3.29)

대내경제	61
「민주조선」, “북한 전역에 3G 이동 통신망 구축”	61
라선시 감시 강화	61
탈북자 가족 송금 단속 강화	62
내달 7인 최고인민회의 개최	62
올해도 아리랑 공연 개최	62
경제활동참가율 70%	63
3월 중 환율 오르고 쌀값은 내려	63
FAO-OIE, “북, 구제역 계속 확산”	63
농업 및 식량	65
북 군인, 주민보다 더 굶주려	65
북 주민 37%, 외부 식량지원 의존	65
북, 중국에서 식량 확보에 안간힘	66
FAO, “북, 올 곡물수확량 소폭 감소 예상”	66
유엔, 국제사회에 “식량 43만톤 지원권고”	66
북, 대중 곡물·비료 수입 전년 대비 크게 감소	67
대외경제	68
북, 대중수출 급증	68
FATF, 대북금융제재 강화 성명 채택	68
중 투먼시, 올해 라진·청진 항로 개통	69
북, 탄소배출권 판매추진	69
라선시 부위원장, 중 지린서 경험 논의	70
북, 대EU수출 전년대비 2배 성장	70
지린성, 동남아·변경지역 국제상품투자협력 전람회 추진	70

남북경협	72
개성공단 월 생산액 3천만달러 회복	72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남북경협보험금 첫 지급	72
지난해 남북교역, 북중교역 절반 수준	73
북 주민 27명, 남하 50일만에 송환	73
방미 북 대표단, “경협 가능성 찾으러 왔다”	73
국민 63%, 대북 쌀 지원 반대	74
남북 전문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협의	74

대내경제

「민주조선」, “북한 전역에 3G 이동 통신망 구축”

3월 4일 「연합뉴스」는 일본 「교도통신」이 「민주조선」을 인용하여, 북한 전역에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된 제3세대 이동 통신(3G)망이 구축되었으며, 이번 3G 통신망의 구축으로 위성통신 설비의 디지털화가 실현됐다고 보도했다고 전함. 또한 「교도통신」은 「민주조선」을 인용, TV의 위성중계와 전화교환기 설비 등의 디지털화 덕분에 통신데이터 송신이 고속화 및 대용량됨으로써 원격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높은 수준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하였으며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하여, “전화 교환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자동교환 능력이 20배로 확충돼 지방의 농촌까지 자동교환식 전화가 설치되게 됐다”고 전함.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3G 휴대전화는 이집트 대형 통신업체 오라스콤과 협력하면서 급속히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북한 내부용 이동 통신망인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4).

라선시 감시 강화

3월 13일 「연합뉴스」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인용하여,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민주화 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라선특별시를 오가는 중국인 사업가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고 보도. 「미국의소리(VOA)」는 중국 내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라선시를 방문한 중국인 사업가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 외에는 일절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이 지역을 드나드는 사람 및 차량 검열도 강도 높게 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 단속도 강화해 휴대전화 소지자와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을 색출하는 등 분위기가 삼엄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13).

탈북자 가족 송금 단속 강화

3월 18일 「연합뉴스」는 미국 동부 지역에 정착한 탈북자의 말을 인용하여, “북중 국경을 통해 탈북자 가족들이 돈을 받는다는 소문이 북한 내부에서 돌기 시작하면서 국경지방에서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화 단속이 강화됐다”고 전함.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국경지역의 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국경을 봉쇄하는 보위부 10호 초소에서도 외화단속이 강화”됐다고 전함. 이와 관련해 한 고위 탈북자는 “탈북자 가족에게 송금된 돈이 장마당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결국 암경제가 커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북한이 통제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최근 북한의 경제난으로 살기 어려워진 보안기관원들이 외화를 뜯어내기 위해 외화 단속을 강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18).

내달 7인 최고인민회의 개최

3월 18일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가 내달 7일 평양에서 열린다고 보도.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의 안건을 밝히지 않았지만 매년 3~4월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서는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새해 예산을 편성했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예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이번 회의는 국방위원회와 내각 등의 조직·인사 정비, 작년 9.28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선임된 후계자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에 선임 여부, 주상성 인민보안부장이 해임된 가운데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이끌 내각 개편이 이뤄질지 등이 주목되는 내용이라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18).

올해도 아리랑 공연 개최

3월 18일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하여 “세계 기네스 기록집(기네스 북)에 등록된 세계적인 걸작품인 ‘아리랑’ 이 계속 진행된다”며 “올해 조선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함. ‘아리랑’ 공연은 올해 7회째 맞이하는 공연으로, 연 인원 10만명이 동원돼 1시간 20분동안 진행되는 세계 최대 집단체조로 구성

되며, 북한은 ‘아리랑’ 공연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18).

경제활동참가율 70%

3월 22일 「연합뉴스」는 통계청이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북한의 인구와 경제활동, 가구 및 주택 현황을 소개했다고 전함.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2%로 남한보다 높은 하지만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3%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시기가 남한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가동은 3.5%로 남한의 10분의 1 수준이었고, 사용하는 난방연료는 석탄 47.1%, 나무 45.1%로, 남한의 가스보일러 50.6%, 기름보일러 25.7%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2).

3월 중 환율 오르고 쌀값은 내려

3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월초에서 3월 23일 현재까지 중국 인민폐 대 북한 돈 환율이 380:1에서 410:1까지 상승하는 동안 식량가격은 1,500원에서 1,600원으로 소폭 상승하여, 사실상 식량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보도.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의 환율대로라면 쌀 1kg당 가격이 1,900원까지는 올라가야 정상이나, 현재 북한 당국으로부터 식량공급을 받는 군부와 간부계층들의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4월 중순부터는 내륙지대에서 시금치와 같은 채소들과 산나물을 채집해서 먹기 때문에 당분간 쌀값이 오르는 힘들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밝혔다(「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3).

FAO · OIE, “북, 구제역 계속 확산”

3월 28일 「미국의소리(VOA)」는 북한 당국이 세계식량계획(FAO)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보도. 국제기구 관계자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확산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식량계획(FAO)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북한 당국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

미국의소리(VOA)」는 전함. 세계식량계획(FAO)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지난달 28일부터 9일간 북한 현지에서 구제역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확산을 막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했으며, 지난 24일에는 북한에 지원할 구제역 백신과 장비 확보와 인력 훈련을 위해 1백만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으나 아직 대북 구제역 지원과 관련한 기부를 받지 못하였으며 향후 북한에 지원할 백신의 종류를 결정하고 구매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국의소리(VOA)」는 전함. 한편 북한 농업성은 지난달 21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18일 평안북도 태천군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으며, 이후 1월말까지 북한 전역의 135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병해 돼지 1만267마리, 소 1,135마리, 염소 171마리가 감염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전함(「미국의소리(VOA)」, 3.28).

농업 및 식량

북 군인, 주민보다 더 굶주려

3월 7일 「연합뉴스」는 대북매체인 「열린북한방송」을 인용하여, 최근 북한에서는 장마당 경제를 활용하는 주민보다 배급에 의존하는 군인이 더 굶주리고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는 「열린북한방송」의 ‘대북식량지원이 북한 사회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브리핑에 따르면, 군인들은 세끼를 다 배급받지만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함. 이에 대해 「열린북한방송」의 하태경 대표는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에 대한 불만을 달래기 위해 군량미를 적게 걷는데다 체제보위를 위해 배급 대상인 군병력을 늘리면서 최근엔 시장에 의존하는 주민보다 배급에 의존하는 군대의 식량 부족이 더 심각해졌다”며 “북한이 해외에서 식량지원을 받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목적은 군량미 보충과 추가 도발 이후의 국제적 제재 대비”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7).

북 주민 37%, 외부 식량지원 의존

3월 8일 「연합뉴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 주민의 37%가 외부의 식량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함. 이 방송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7일 내놓은 ‘2011 인도주의 활동보고서’를 인용하여 국제적 대북 식량지원의 감소로 식량난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의 37%가 외부 사회의 식량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자연재해와 식량난을 겪은 북한 주민의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올해 대북사업 예산이 미화 1,200만달러로 늘어나 올해 440만명의 어린이와 산모 등을 지원하는 등 사업 지역 및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8).

북, 중국에서 식량 확보에 안간힘

3월 22일 「연합뉴스」는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심각한 식량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중국에서 식량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보도.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에 의하면 북한이 해외 공관에 할당량을 배정하여 식량 확보에 나서도록 지시했으며 북한 총영사관은 중국 동북 3성 정부에서 각각 1천톤씩 지원받았으며 추가 식량 확보를 위해 중국내 조선족 기업인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또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말 세계 40개국 재외 공관에 할당량을 배정하여, 각국 정부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했으며 영국 외무부도 북한 대사관이 영국 정부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22).

FAO, “북, 올 곡물수확량 소폭 감소 예상”

3월 22일 「연합뉴스」는 「미국의소리(VOA)」방송을 인용하여, 북한이 지난 겨울 심각한 한파에 따른 이모작 작물의 냉해 피해로 올해 수확량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보도. 「미국의소리(VOA)」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전문가들이 최근 북한에서 실시한 작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국가보고서: 북한’ 을 인용하여 겨울밀과 감자 등 봄철 이모작 작물 수확 전망이 나빠 올해 식량 생산량이 약간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2).

유엔, 국제사회에 “식량 43만톤 지원권고”

3월 25일 「연합뉴스」는 유엔이 대북 식량실태를 조사한 결과 북한 주민 600만명 이상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유엔은 국제사회에 43만톤의 대북 식량지원을 권고했고,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도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은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 유엔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 까지 실시한 북한에 대한 식량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여름철 홍수와 혹독한 겨울 등 일련의 충격파들이 북한을 식량위기에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계층이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고, 5월부터 7월 사이인 ‘식량부족기(lean season)’ 가 시작될 무렵 북한의 식량이 바닥날 전망이라

고 발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5).

북, 대중 곡물·비료 수입 전년 대비 크게 감소

3월 29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올해 1월과 2월 두달 동안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2.4% 줄었다고 보도. 이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부원장은 2월 중 북한의 곡물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은 북한보다는 중국의 사정이 더 작용한 결과일 수 있으며 북한의 외환부족이 원인이 아닌 중국이 수출할 곡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권 부원장은 중국의 곡물 사정이 불안정해서 회사들이 수출허가증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 1월과 2월 두달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합계는 전년도의 40%에도 미치지 못한 다며, 이 때문에 북한이 6월에 수확 예정인 이모작 작물의 작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9).

대외경제

북, 대중수출 급증

3월 5일 「연합뉴스」는 「미국의소리(VOA)」 보도를 인용하여 지난 1월 북한의 대중수출이 지난해 동기의 3.5배로 늘고 북한과 중국간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배를 기록하는 등 북중간 교역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 「미국의소리(VOA)」는 중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 “올해 1월 북중간 교역액은 지난해 1월의 2.3배로 지난해 1~2월 두달간 교역액 합계보다도 많다” 며 “특히 북한의 대중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고 분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5).

FATF, 대북금융제재 강화 성명 채택

3월 6일 「연합뉴스」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이란과 같은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였다고 보도.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주(駐)OECD 한국대표부에 의하면,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지난달 25일 열린 총회에서 대북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 에서 이란과 같은 수준인 ‘대응 조치’ 로 높이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이에 대해 OECD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1월 처음으로 FATF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으나 이후 자금세탁 관련제도의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며 “그래서 이번 FATF 총회에서 대북 금융제재 강화 성명서도 아무런 반대 없이 통과됐다” 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6).

중 투먼시, 올해 라진·청진 항로 개통

3월 7일 「연합뉴스」는 「연변인터넷방송」과 김기덕 투먼시 서기간의 인터뷰 보도를 인용하여 “투먼시가 올해 청진항과 라진항을 이용한 해상 항로를 개통하기로 했다” 고 보도. 김 서기는 “올해 투먼시의 지역내 총생산액(GRDP)을 31억위안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대외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며 “북한으로부터 사용권을 확보한 청진항 3, 4호 부두를 이용, 남방으로 물자를 운송하는 해상 항로를 연내에 개통하겠다고 밝혔으며, 투먼-라진항을 잇는 해상 항로도 올해부터 운항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7).

북, 탄소배출권 판매추진

3월 11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수력발전소를 유엔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부족한 외화를 충당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고 보도. 또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부족해진 외화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수력발전소 사업을 유엔에 등록한 뒤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11).

미, 북 100여개 기관·개인 우편물도 제재

3월 16일 「연합뉴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인용하여 미국의 우정공사(USPS)가 북한의 노동당 39호실을 비롯한 기관·개인 주소 100여곳으로의 우편물 배달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함.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배달금지 대상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을 비롯한 북한 정부기관에서부터 무역회사, 은행, 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 원자력총국의 리제선 총국장, 북한 무기밀매 거래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 윤호진 등이 배달금지 목록에 들어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16).

라선시 부위원장, 중 지린성 경험 논의

3월 18일 「연합뉴스」는 「지린일보」를 인용하여 황철남 북한 라선시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중국 지린성을 방문, 왕루린 성장과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 왕 성장은 “‘창지투 개방 선도구’ 개발 계획에 따라 지린-훈춘 여객철도가 착공되는 등 지린성의 기반시설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는 양측의 변경 무역과 경제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황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린성과의 경제 합작과 교역 증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보도, 대북 전문가들은 황 부위원장의 이번 방문이 중국의 라진항을 이용한 동해 항로 운항 본격화와 투먼-청진 해상 항로의 연내 개통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 합영투자위원회가 중국 상무부와 라선특구 5개년 합작개발 계획에 합의한데 따른 후속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18).

북, 대EU수출 전년대비 2배 성장

3월 22일 「연합뉴스」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인용 북한이 지난해 네덜란드에 5,500만유로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면서 대(對)유럽연합(EU) 수출액이 전년대비 배 넘게 늘어났다고 보도. EU의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 가 최근 발표한 ‘2010년 대북한 교역통계’ 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과 EU내 27개국간 교역액은 2009년보다 43%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북한의 대 EU 수출액이 2009년 보다 2배 넘게 늘어난 데 따른 것” 이라며 “작년에 북한이 EU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2009년과 비슷한 수준” 이라고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2).

지린성, 동남아·변경지역 국제상품투자협력 전람회 추진

3월 23일 「연합뉴스」는 「지린일보」 보도를 인용하여 다음 달 창춘에서 한국과 북한 등 동남아국가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동남아·변경지역 국제상품투자협력전람회’ 가 열린다고 보도. 이번 박람회는 8천평방미터 규모의 전시장에 ▲동남아 상품 전시관 ▲변경지역 상품 전시관 ▲대만 상품 전시관 등으로 나뉘어 300여개의 부스가 설치·운영

되고 국내외 기업과 무역업자 1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상품 전시·판매는 물론 참가 업체간 투자와 경제 협력 논의도 이루어진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중국내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전람회 명칭에 ‘변경지역’ 을 사용하고, 변경지역 상품 전시관을 별도 운영기로 한 것으로 보아 이번 전람회는 지린성이 최근 들어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선 북한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또한 창춘시 무역협회가 오는 5월 개최되는 제14차 봄철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참가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협회는 최근 평양전람회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시장을 개척할 좋은 기회라며 현지 기업들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3).

남북경협

개성공단 월 생산액 3천만달러 회복

3월 20일 「연합뉴스」는 개성공단 월 생산액이 지난해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3천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1월 개성공단 생산액은 3,105만달러를 기록해 작년 12월의 2,909만달러보다 6.7% 증가하였으며, 개성공단 월 생산액이 3천만달러를 웃돈 것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 이는 천안함 격침사건에 따른 정부의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가 금지되고 있지만 북측 근로자들이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에 따라 신변안전을 이유로 개성공단 남측 체류인원을 현재 하루 500여명 선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연합뉴스」, 3.20).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남북경협보험금 첫 지급

3월 23일 「연합뉴스」는 2004년 남북경협보험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첫 사례가 나왔다고 보도.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하고 2008년부터 개성공단 협동화 공장에 공동투자를 해왔던 6개 기업은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정부의 5.24 조치로 공장 건축에 차질을 빚었다며 지난해 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심의를 통해 ‘5.24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개성공단 공동투자 6개기업에 대해 보험금 43억2,800만원 등 총 4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3).

지난해 남북교역, 북중교역 절반 수준

3월 23일 「연합뉴스」는 23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10년 남북교역·북중교역 동향 비교’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남북교역액은 북중교역액의 절반 수준으로 전년과 비교해 비중이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보도.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의 우리나라의 남북교역액은 북중교역액의 55% 수준이었고, 전년도 연간 비중인 64%보다 9%포인트 떨어졌으며 이는 남북교역이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북중교역액은 전월과 비교해 계속 증가한 반면 남북교역액은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3).

북 주민 27명, 남하 50일만에 송환

3월 28일 「연합뉴스」는 지난달 5일 서해 상에서 표류해 남하한 북한 주민 27명이 27일 오후 북측으로 송환됐다고 보도. 북한 주민 27명은 28일 낮 12시 55분께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상에서 자신들이 표류 때 타고 내려온 선박 편으로 북측으로 귀환하였으며, 송환 당시 북측에서는 경비정 한 척이 NLL 인근까지 나와 북측 주민들의 선박을 인도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북한 주민 31명은 지난달 5일 연평도 인근 서해 NLL을 넘어왔으며, 31명 가운데 이날 송환된 27명은 북으로의 귀환, 나머지 4명은 귀순을 결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27명은 지난달 5일 남하한 지 50일만에 북측으로 돌아갔으며, 정부는 이들을 지난 17일 오후 서해 상으로 송환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이 고장 나면서 송환 일정이 열흘이나 미뤄졌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28).

방미 북 대표단, “경협 가능성 찾으러 왔다”

3월 28일 「연합뉴스」는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 초청으로 방미중인 북한 경제대표단 일행이 27일 오후(현지시간) 뉴욕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뉴욕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고 보도. 북한 대표단 중 한 명은 이번 방문 목적에 대해 “우리는 경제 고찰단이다. 우리와 미국 사이의 경제협조,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 가능성을 찾기 위해 왔다” 고 밝혔으며, 북미 양측 모두 “자본주의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 찾아온 북측 경제 관료들일 뿐”이라며 특별한

의미 부여를 경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그러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방북, 유엔의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 필요성 등이 거론되는 와중에 이들의 방문이 단순히 '자본주의 경제 공부'가 목적인지, 또는 이들의 말대로 '북미간의 경제협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28).

국민 63%, 대북 쌀 지원 반대

3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겨레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29일 보도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62.7%가 북한에 쌀을 '지원해선 안 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함. 대북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북 쌀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것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며, 민간인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 보낸 물자가 군대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함. 이에 유엔은 24일, 북한 주민 6백만 명 이상이 긴급 식량지원을 필요로 한다면서 43만 톤의 국제적인 지원을 권고한 바 있으나 한국의 통일부는 28일 이와 관련 "현재 쌀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함. 전문가에 의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처럼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덧붙임(「자유아시아방송(RFA)」, 3.29).

남북 전문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협의

3월 29일 「연합뉴스」는 29일 남북의 전문가들이 마주 앉아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도. 전문가들은 일본 대지진 시점에 맞춰 북한 측이 내민 백두산 화산 협의 카드를 통해, 6자회담 재개의 선결조건이나 다름없는 남북관계 개선에 매달리는 북한의 대내외 상황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전문가에 의하면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이 '백두산 화산 협의'를 제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김 위원장의 이름이 붙은 백두산의 정일봉에 새해 첫 아침이나 김 위원장의 생일에 여러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거듭하는 등 북한이 '성지화' 하는 백두산에 대해 폭발 개연성을 시사하며 공동연구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북한이 자칫 백두산으로 상징되는 체제 정통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화산 공동연구를 제안한 것은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남북관계 선결 요구에 부응하고자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29).

자료정리 : 이원경

-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는 무단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